

제403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임시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3년2월21일(화)

장 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75)
2.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03)
3.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04)
4.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09)
5.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55)
6.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49)
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18)
8.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47)
9.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59)
10.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18)
11.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99)
1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67)
1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27)
1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82)
15.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19)
16.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16)
17.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218)
18.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932)
19.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70)
20.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98)
21.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84)
22.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75)
23.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70)
24.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60)
25.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74)
26.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95)
27.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98)
28.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30)
29.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59)
3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55)
3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60)
32.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32)
33.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82)

34.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46)
35.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05)
36.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05)
3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93)
38.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94)
39.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208)
40.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52)
41.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설정에 관한 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38)
42.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51)
43. 민간해양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76)
44. 민간해양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85)
45.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72)
46.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18)
47. 전기 요금 및 유가 상승 등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48. 업무현황보고
 - 해양수산부
 - 해양경찰청

상정된 안건

- 의사일정 상정의 건 4
1.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75) 4
2.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03) ... 4
3.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04) 4
4.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09) 4
5.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55) 4
6.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49) 4
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18) 4
8.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47) 4
9.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59) 4
10.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18) 4
11.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99) ... 4
1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67) 4
1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27) 4
1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82) 4
15.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19) ... 4
16.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16) 4
17.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218) 5
18.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932) 5
19.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70) 5
20.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98) ... 5
21.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84) ... 5
22.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75) 5

23.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70)	5
24.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60)	5
25.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74)	5
26.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95)	5
27.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98)	5
28.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30)	5
29.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59)	5
3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55)	5
3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60)	5
32.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32)	5
33.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82)	5
34.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46)	5
35.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05)	5
36.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05)	5
3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93)	5
38.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94)	5
39.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208)	5
40.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52)	5
41.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설정에 관한 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38)	5
42.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51)	5
43. 민간해양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76)	5
44. 민간해양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85)	5
45.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72)	5
46.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18)	5
47. 전기 요금 및 유가 상승 등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6
48. 업무현황보고	6
- 해양수산부	
- 해양경찰청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소병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을 상정 심의한 후에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윤석열 정부의 2023년도 해양수산 관련 정책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우리 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정부 당국이 제대로 파악하고 해결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우리 어촌은 바람 앞의 등불과 같은 상황입니다. 출어 비용 중 많게는 60%를 차지하는 면세유값이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전과 비교했을 때 2배가량 올라 조업을 포기하는 어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펌프와 산소발생기를 가동해야 하는 양식어가에서는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적자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어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업용 에너지 비용과 면세유 폭등에 대한 지원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해양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공급체계 개선이 필요한 것도 에너지원을 수입에만 의존해서 어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내기 위함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차례 지적하셨지만 뚜렷한 대책이 보이지 않아 수산물 소비가 크게 위축될까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소속 과학자들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두고 방류가 아닌 투기라고 부를 만큼 그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지난 4년 3개월 동안 오염수 내 64개의 방사성 핵종 중 9개 핵종만을 검사해 표본을 제공하는 등 불완전하고 신뢰할 수 없으며 편향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사실상 검증이 감감이에 가깝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태평양도서국포럼 소속 과학자들은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고 모든 부분에서 현재 일본의 해양 오염수 투기 문제를 신뢰할 수 없다, 자기네들이 내보내려고 하는 이런 모든 부분을 신뢰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을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이르면 올해 4월부터 오염수 방류가 시작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과학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모든 채널을 동원해 일본 정부가 오염수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저장하고 있는 오염수에 관한 정보는 하나도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지만 전혀 관련된 정보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정부가 총력을 다해 대응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외에도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에 당면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께서는 방금 말씀드린 문제들을 포함하여 우리 바다와 어촌의 여러 현안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 의사일정 상정의 건

(10시16분)

○위원장 소병훈 먼저 법안 상정과 관련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59조는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15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

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만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결정 제42항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법상 숙려기간을 경과하지 않았으나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75)

2.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03)

3.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04)

4.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09)

5.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55)

6.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49)

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18)

8.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47)

9.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59)

10.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18)

11.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99)

1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67)

1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27)

1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82)

15.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19)

16.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16)
17.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218)
 18.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932)
 19.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70)
 20.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98)
 21.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84)
 22.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75)
 23.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70)
 24.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60)
 25.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74)
 26.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95)
 27.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98)
 28.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30)
 29.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59)
 3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55)
 3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60)
 32.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32)
 33.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82)
 34.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46)
 35.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05)
 36.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05)
 3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93)
 38.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94)
 39.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208)
 40.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52)
 41.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설정에 관한 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38)
 42.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51)
 43. 민간해양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76)
 44. 민간해양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85)
 45.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72)
 46.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18)
- 위원장 소병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6항까지 모두 46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법률안의 명칭과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 구두로 제안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다음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에 한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6항까지 이상 46건의 법률안을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7. 전기 요금 및 유가 상승 등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10시19분)

○위원장 소병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전기 요금 및 유가 상승 등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결의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유가 및 전기·가스 요금이 크게 인상됨에 따라 농어업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의 인상은 대형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가나 시설원예농가 그리고 어선을 운용하는 어가 등에 전보다 훨씬 큰 유류비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 생산 및 유통시설, 수산물 양식업 등에 사용되는 농사용 전기 요금도 급격하게 인상됨에 따라 생산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었는데 이는 농수산물 가격의 인상을 통해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거쳐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전기 요금 및 유가 상승 등에 따른 농어업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조속히 적절한 지원을 해 줄 것을 촉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 및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7항 전기 요금 및 유가 상승 등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결의안의 자구 정리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48. 업무현황보고

- 해양수산부
- 해양경찰청

(10시21분)

○위원장 소병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8항 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기관장께서는 업무현황보고 자료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포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상세 보고는 생략하고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해양수산업 발전과 해양수산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해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해양수산 종사자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해양수산 분야는 최고 수준의 성과를 창출한 바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 해운산업은 매출액 383억 불, 수산식품 수출은 31.6억 불을 달성하는 등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여 작년 이례적인 고유가 상황 속에서도 어업인들의 부담을 다소나마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의 2023년도 예산은 6조 4333억 원 규모로 편성되어 주요 해양수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해양수산 분야가 놓인 여건과 상황은 여전히 녹록하지 않습니다.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무역 둔화로 해운물류산업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수산업의 성장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깨끗한 바다와 수산식품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년에 해양수산부는 ‘혁신하는 해양산업,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삼아 우리가 당면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먼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수산업과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양식·유통·가공 시설의 규모화·스마트화로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세계시장을 선도할 블루푸드 산업 육성을 통해 수산식품 수출

액 35억 불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총 3조 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과 더불어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도 직불금을 지급하는 등 어촌 소멸을 막기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수출경제를 뒷받침하는 국제물류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불황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해운산업을 구축하기 위해 해운산업 위기대응펀드를 새롭게 조성하고 공공 선주사업과 중소선사 특별지원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항 진해신항과 광양항을 한국형 스마트항만으로 신속히 구축하는 등 항만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항만배후단지를 적기에 개발·공급하여 동북아 물류 중심의 위상을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해양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레저·생태·치유 등의 해양 콘텐츠를 집적하여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를 조성하는 한편 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 디지털 해상교통 플랫폼 등 해양모빌리티 산업의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양바이오산업과 해양에너지산업이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넷째, 쾌적하고 살기 좋은 연안을 조성하겠습니다.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부터 재활용까지 전 주기를 철저히 관리하고 국가해양정원 등을 조성함으로써 해양생태계의 가치를 증대시키겠습니다.

해양수산 분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노후어선 설비 교체, 양식장 친환경설비 보급 등을 지속 추진하고, 갯벌 복원 등 탄소흡수원을 적극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재해에 대비하여 연안 지역의 취약지구를 지속 정비하고 노후된 항만을 리뉴얼하는 등 연안 지역의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확고한 해양영토 수호와 함께 해양수산 분야의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동해상에 종합해양과학기지를 구축하고 중국 불법 어업 대응을 위해 대형 어업지도선을 신규

로 배치하겠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비하여 우리 해역의 방사능 조사를 확대하고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검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정보호 사고 등 어선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어선 건조부터 조업 방식에 이르는 연근해 어선 전 주기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해양수산부 전 직원은 오늘 보고드리는 업무계획과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조언은 국민과 해양수산 가족 모두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 가는 데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현황과 주요 현안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상근 차관은 국무회의 참석으로 인해 참석이 늦어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재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송명달 해양정책실장입니다.

이경규 수산정책실장입니다.

강용석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입니다.

우동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입니다.

윤현수 해운물류국장입니다.

홍종욱 해사안전국장입니다.

이수호 항만국장입니다.

김재철 대변인입니다.

노진학 감사관입니다.

김혜정 정책기획관입니다.

이시원 해양정책관입니다.

정도현 해양환경정책관입니다.

김현태 국제협력정책관입니다.

최용석 수산정책관입니다.

최현호 어업자원정책관입니다.

권순옥 어촌양식정책관입니다.

이철조 국립해양조사원장입니다.

홍래형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병훈 조승환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존경하는 소병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해양경찰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올해 해양경찰청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월 4일 신안군 정보호 전복 사고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장 구조에 함께한 해수부·해군·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지역주민, 민간 잠수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합동감식 결과와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겠습니다.

또한 사고 대응 과정에서의 보완점은 적극 개선하여 해상의 어려운 조건에서도 항상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임무를 완수하는 강인한 해양경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3년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경비력 강화로 해양주권을 확립하겠습니다.

위성영상, 항공기 등을 이용한 감시정보 분석으로 경비세력을 선제적으로 배치하여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차단하고 경계미확정해역 전략순찰을 강화하여 해양영토 관할권과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양안보 위협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위성, 무인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해양경비정보 융합플랫폼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국민이 체감하는 바다안전망을 만들겠습니다.

지자체 합동으로 연안위험구역을 집중 관리하고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연안안전지킴이를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선박 전복 등 고위험 사고에 특화된 교육훈련 강화와 수중 수색구조에 적합한 장비 보강으로 사고 대응력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해역별 광역 VTS 구축과 관제정보 통합 플랫폼 개발로 선박교통관제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전문성을 확보하여 해양수사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해양범죄 수사에 특화된 형사사법정보 시스템 도입과 개인 자격제도 운영 등 체계적인 인력 관리를 통해 해양수사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마약 범죄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담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고 집중 단속을 통해 마약 범죄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검찰, 경찰, 관세청 등 국내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확고히 하고 해외 마약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주요 마약 생산국 정부기관과의 공조체계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적극적인 해양환경 보전 활동을 확대하겠습니다.

해양오염사고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500t급 방제함정 3척을 현장 배치하고 2026년까지 2척을 추가 건조하겠습니다.

또한 해역별 사고 유형에 따른 맞춤형 교육·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고위험 시설과 장기계류 선박에 대한 철저한 예방점검으로 해양 오염 위험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섯째, 내부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회 포럼 등 다양한 전문가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확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고 그간 운영해 왔던 각종 제도를 과감히 혁신하여 업무역량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R&D 투자를 확대하여 연구 성과의 현장 활용성을 높이는 한편 기술역량 제고를 위한 민관 교류 협력을 적극 활성화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세부 내용과 현안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소병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해양경찰은 기본에 충실하고 현장에 강한 국민의 해양경찰이 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조언과 제안은 향후 정책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리에 참석한 해양경찰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진 차장직무대리입니다.

이명준 경비국장입니다.

여성수 구조안전국장입니다.

박승규 국제정보국장직무대리입니다.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입니다.

최정환 장비기술국장입니다.

김성중 수사국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병훈 김중욱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여기구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해경한테 자료를 요청드리는데요. 해경 연수원 설립 관련해서 2021년도 자체 예산으로 한 연구용역보고서 또 두 번째로는 2022년 정부 예산으로 한 연구용역의 과업지시서와 최종 연구용역보고서를 12시까지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청장님, 용역보고서는 바로 제출하실 수 있겠지요?

○해양경찰청장 김중욱 확인되는 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구 위원 확인이 아니라 다 끝났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장 김중욱 예,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삼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서삼석 위원 해양경찰청장님!

○해양경찰청장 김중욱 예.

○서삼석 위원 귀 청에서 제출한 청장의 인사말씀 1페이지에 ‘신안군 정보호 전복 사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장 김중욱 예.

○서삼석 위원 이 정보호 전복 사고, 신안군의 사고입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중욱 사건 관할 소재지가 해상의 신안군으로부터 이렇게……

○서삼석 위원 그러면 신안군 해역이랄지 정확한 위치를, 지명을 표시를 해 줘야지 마치 신안군이 관리하고 있는 신안군 소속 정보호가 전복된 것처럼 오해할 수 있잖아요.

○해양경찰청장 김중욱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해양수산부 업무현황보고 자료의 23페이지를 보면 사고 개요에 ‘전남 신안군에서 정보호 전복 사고가 발생했다’, 최소한 이 정도로

라도 표현을 해야지. 잘못된 겁니다.

○해양경찰청장 김중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병훈 서삼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실 때 위원장 보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남 나주시화순군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장관님, 일본 측이 예고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기가 목전에 다가왔는데요.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수산업과 어업 종사자들이 굉장히 공포에 떨고 있는 그런 상황 잘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알고 있습니다.

○신정훈 위원 정부가 약속했던 오염수 확산 시뮬레이션 결과가 16일에 발표됐는데 오염수 방류 4~5년 후에도 우리 해역에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도 미미할 것이다, 즉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해도 우리 해역에 큰 피해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해양수산부의 결론입니까? 우리 정부의 결론이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그렇지 않고요. 이번에 실시한 시뮬레이션은 모델 고도화한 이후에 현 상황에서 확보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활용한 첫 연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수 방류에 따른 우리 해역의 영향은 시뮬레이션 결과와는 별개로 일본의 방출 계획 등 원자력 안전 기구의 검증 등을 통해서 별도로 검토돼야 될 사항입니다.

○신정훈 위원 해수부 주문으로 해수부 산하 해양과학기술원이 수행한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합니까? 그냥 연구기관의……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이게 얼마만큼으로, 어느 정도 농도로 우리 해역에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에 대한……

○신정훈 위원 일단은 정부의 이 발표,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전 국민적인 우려가 비등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 학회의 세미나를 통해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공신력 있게, 책임감 있게 발표하고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물쩡 넘어간 느낌이 들어요.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라든가 이 결과에 대해서 보증도 못 하면서 아무 영향이 없다 이렇게 안일한 내용을 발표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책임 있는 발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증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이번 첫 번째는, 고도화 이후에 첫 번째 모델을 통해서 연구자들의 예측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학술적 논의를 위해서 학회 발표를 택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신정훈 위원** 여론을 호도할 수 있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추후에 IAEA의 검증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추가 시뮬레이션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정훈 위원** 실제로 우리 해역의 영향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오염수의 성분과 주요 핵종별 검출값이 수반되어야 되는데요. 이번 시뮬레이션에서 방출 오염수의 핵종 검출값이 어떤 자료에 근거해서 나왔는지 알고 계신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삼중수소를 기준으로 했고 일본 도쿄전력의 방출 계획에 기초한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훈 위원** 실측 정량 데이터가 아니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물론입니다. 그것은 지금 IAEA에서 검증……

○**신정훈 위원** 일본이 제시한 목פות값으로 시뮬레이션을 했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가해국이 이야기하는 그런 발표만 제대로, 그대로 다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지금 현재 입수 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일본의 계획에 대한 안전성의 검증과 일본이 방류할 의지나 능력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IAEA에서 검증을 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나라에서 참여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훈 위원** 일본의 의도, 목פות값 그대로 이 시뮬레이션에 하니까 일본 기대대로, 기댓값대로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해양과학기술원을 비롯해서 외교부 그리고 또 유관기관에 일본 측의 정량 데이터, 그러니까 실측 데이터를 요구한 내역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그런 요구한 바도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정량적 실측 데이터도 없이 일본 측이 제시한

목פות값만 그대로 시뮬레이션에 돌려서 국책연구기관이 발표한 것은 정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 일본의 방류 명분만 높여 주는 것 아니냐, 그리고 국내적인 우려에 대해서 그냥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문제에서도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단히 저자세 외교가 많이 문제되고 있는데요, 수산물의 안전을 책임져야 될 해수부장관은 외교부의 이런 저자세 외교에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으로라도 일본의 ALPS 관련 데이터를 요구하고 분명한 검증이 필요함을 거듭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외교라인을 통해서 자료 요구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 범정부 TF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범정부 TF에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 위원** 일본 정부에 끌려다니다가 실익도, 명분도 놓치는 그런 일방적인 저자세 외교가 아니라 국민들의 우려에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해수부가 분명히 입장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 위원** 두 번째로는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저는 당분간 해수부의 가장 큰 과제가 해운업 다운사이클 파고를 현명하게 극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에서 해운물류업 재편에 대한 그림 없이 국적선사가 공중분해되었던 그런 박근혜정부의 실정을 재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글로벌 컨테이너 시장을 보면 수요 증가보다 공급 증가가 확대되고 있어서 최소한 24년까지 공급 초과 국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 역시 다운사이클을 피해갈 수 없고 특히 컨테이너선이나 벌크, LNG선에 비해서 컨테이너선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 최대 선사인 HMM의 경우 최근 2년 동안 15척의 선박을 집중적으로 발주했는데요. 24년까지 초과 공급 피크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도 그런 자료 갖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신정훈 위원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HMM 매각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산과 해진공에서 인수 대상 후보자들을 상대로 제안서 발송 준비 중인 상황이라는데 알고 계신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그런 상황은 현재 아니고요. 컨설팅을 하기 위한 제안을, RFP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컨설팅사를 선정하기 위한, 그러니까 매각 타당성 컨설팅사를 선정하기 위한……

○신정훈 위원 지난 국감에서 장관께서는 답변과정에서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해운업의 보릿고개가 예상되는 올해와 내년 매각 절차를 가속화할 경우에 대단히 위험스럽다 하는 세간의 우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점 매각이 될 것이다 하는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기업 가치라는 것은 반드시 주가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난번 우리 해운시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코로나19와 항만 봉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사항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정훈 위원 문재인 정부 해운재건 정책의 성공 그리고 또 팬데믹 시기의 해운업의 유례없는 수익 등으로 우리 해운업이 전반적으로 위기대응능력이 상승해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정훈 위원 따라서 지금 저점 매각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나 본 위원의 제기에 대해서 장관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지난번에 국감에서 답변한 내용과 더불어서, 상기하시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지금 HMM 매각과 관련해서는 해운업 특성이라는 그 자체가 사실 공공이 운영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소신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주인을 찾아 줘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기 때

문에 특정 매각 시점이나 이런 걸 지금 확정해 놓고 있는 바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매각 타당성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서 매각 필요성 분석이나 인수 후보군 탐색 분석, 기업 실사 등을 수행해서 해운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이나 적정한 인수 후보 기업 등장 등 다양한 변수를 감안해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유연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점을 특정해 가지고서 매각을 추진한다 이런 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정훈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안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영 위원 장관님, 아까 신정훈 위원님께서도 물어보셨지만 저도 이어서 몇 가지 여쭙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 공동 연구팀이 후쿠시마 오염수 속의 삼중수소 확산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안호영 위원 그런데 발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 국민들이 우리 해양환경이 오염되지 않았고 또 수산물이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된 겁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고도화된 모델로 우리 해역에 언제쯤 얼마만큼의 영향이 오는가를 제한된 자료를 가지고 첫 번째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에 불과합니다.

○안호영 위원 그러니까 결과에 불과한데, 결국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그걸로 인한 실제 해양 오염이 얼마나 됐는지 또 우리 수산물을 안전하게 신뢰할 수가 있는 건지 이런 점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시뮬레이션 결과로는 그걸 확신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검증된 자료가 나오게 되면 더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한 초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호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정부에서 안전성에 관련된 우려를

정확하게 해소를 못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연구 내용을 보면 64개 방사성 핵종 중에서 삼중수소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만 담겨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안호영 위원 그런데 이게 64개 방사성 핵종 중에서 삼중수소만 대상으로 한 이유가 뭐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일단 일본 삼중수소가 가장 많이 방출되고요, ALPS라는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나오는 핵종이고요. 또 삼중수소가 부유물에 흡착이나 침강되는 프로세스가 없이 가장 멀리 올 수 있는……

○안호영 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물어볼게요. 삼중수소를 하는 거는 좋아요. 그거는 필요한 일이라고 보는데 이번에 삼중수소 외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검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특히나 얼마 전에 검출 기준에 대해서 64개 중에서 반절로 낮춰서 검증을 했다 이렇게 일본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어떤 입장입니까, 우리 해수부는?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 측정평가 대상 핵종을 대폭 줄이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64종 중에서 37종을 제외하고 또 4종을 넣어서 측정 핵종 수를 31개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안호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우리 해수부의 입장은 혹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뭐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반감기 같은 거나 또 기준 농도보다 확실하게 낮은 이런 부분들을 제외했다 이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안호영 위원 어차피 이게 국민의 안전에 관련된 문제는 꼭 해수부만의 문제는 아닐 거고 정부 전체의 문제이기도 한데 특히 주관 부처인 해수부는 해양환경 또 수산물과 관련이 크니까, 국제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장관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알겠습니다.

○안호영 위원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번에 측정 대상에서 뺀 핵종 중에서 세슘이라든가

스트론튬 동위원소가 있는데 동위원소 스트론튬 90의 경우에는 이게 뼈에 축적돼서 혈액암을 유발하는 걸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들을,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해야 되고.

그다음에 핵분열이 종료됐기 때문에 빼야 된다, 반감기를 고려해서 핵종을 선정해야 된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일본의 원자로로는 지하수라든가 빗물이라든가 물만 있으면 핵분열을 하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이 계속 생성되고 있다라는 게 전문가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부가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다른 것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ALPS 기술 관련해서 ALPS 기술로는 삼중수소만 나올 수 있고, 제거를 못 하고 나머지는 다 제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2018년도 도쿄전력에서 1차 정화처리를 했는데 그때 정화처리를 마친 오염수 대부분에 고위험 방사성 물질 스트론튬이라든가 요오드라든가, 세슘 137, 탄소 14, 요오드 129 이런 것들이 기준치의 최대 2만 배 이상 남아 있다 이렇게 공식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ALPS 기술로 삼중수소만 제외한 나머지가 제거된다 이것에 대해서도 다른 견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IAEA에서 ALPS로 처리된 오염수 성분 분석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적인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것 국민의 안전에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일본의 입장만을 너무 생각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만약에 그 결과도 그렇고 향후 우리 대응과 관련해서, 이번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는 방사성의 농도나 양에 대해서만 측정을 한 거고 이게 인체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생물을 통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까지 분석한 건 아니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그렇습니다.

○안호영 위원 그런데 지난 7일 후쿠시마현에서 잡힌 농어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1kg당 85.5 Bq이 검출됐다는 그런……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기사 봤습니다.

○안호영 위원 예,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생태계를 통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감시선을 띄워서 감시를 하겠다 이런 복안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그렇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해수 채취를 하도록 정점, 우리 해역에 들어오는 해수 채취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호영 위원 하나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혹시 국제법적으로 대응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어떤 대응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국제법적 대응에 대해서는 외교부에서 일본의 국제법적 의무를 잘 이행하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호영 위원 그러면 해수부에서는 국제법적으로 어떤 규제책이 있고…… 왜냐하면 외교부에 맡기더라도 결론적으로 협상은 외교부가 하겠지만 그 영향을 받는 것은 우리 수산업, 우리 어민들이 받는 거고 국민들이 받는 건데 장관께서 외교부에만 그렇게 떠넘길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범정부 TF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저희들이 계속적인 저희 입장에 대해서는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안호영 위원 잘 아시겠지만 국제 해양법협약상 206조에 각국이 해양환경에 실질적인 어떤 오염이나 중대하고 해로운 변화를 가져올 때는 해양환경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을 평가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고서를 송부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만약에 그런 것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중재재판을 청구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방류를 중지할 수 있는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이 돼 있는 건 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알고 있습니다.

○안호영 위원 그것에 대해서 해수부에서 외교부에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그러니까 요구와 정부의 결정에 의해 가지고서 206조 조항뿐만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 국제법적 의무를 일본 정부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호영 위원 그 진행 상황들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줄 수 있어요?

정부 부처에서 그 문제에 대해 국제법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논의되는 경과들을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그것은 TF에다가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TF에다 맡길 일이 아니고 그것은 장관께서 하실 일이다 이 말이에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안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말씀 드리겠는데요, TF가 있는데 사실 TF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호영 위원도 TF 상황을 보고해 달라는 건데 적어도 진행 상황만은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번에 오염수에 들어 있는 예순네 개의 방사성 핵종 중에 이미 반감기가 지나서 없어져야 될 핵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PIF 과학자들이 이번에 일본 도쿄전력 자료를 보고서 그게 남아 있는 걸 발견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미 일본 당국이나 도쿄전력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일본에도 요구해야 되고 그리고 일본에서 발표하는 것만, 그러니까 도쿄전력에서 발표하는 내용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안 되겠다.

특히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태평양 연안국 포럼의 과학자들이 많은 결과를, 오염수 관련된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있고 일본의 발표를 비교·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해수부에서 참고해서 가지고 TF에 속해 있지만 우리 어민들과 관계도 있기 때문에, 수산물과도 관계가 있고

그래서 좀 더 해수부가 직접적으로 앞서서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이어서 부산 서구동구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 안병길입니다.

장관님이 시물레이션을 해 놓고 모델 고도화한 것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후쿠시마 방류수 해양 확산에 대한 시물레이션이 이게 처음입니까? IAEA에서 했잖아요, IAEA에서 했고. 물론 일본 거는 저희들이 신뢰도가 낮아서 못 믿는다 그래서 지난 2020년·21년 계속 국회에서 왜 우리 장비가 자체 개발한 확산모델이 있는데 안 하느냐, 한번 해 보자. 국회에서 지적하고 해서 확산모델에 의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신뢰성이 있는 걸 해 보자 한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그렇습니다.

○안병길 위원 그러면 이 결과가 IAEA 결과라든지 이전 문재인 정부 시절 그때 또 정부에서 결론 내린 게 있어요. 그것하고 달라진 게 있습니까?

PPT 좀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 보십시오. 다 그때—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 낸 해양수산부 입장입니다—유의미한 피폭 가능성은 매우 낮음, 유의미한 영향은 없을 것…… 이번 결과하고 똑같잖아요. 그리고 IAEA 결과도 이 이전에 이것하고 똑같았어요.

이것을 확인하는 시물레이션 결과를 했으면 장관께서 자신 있게 이것은 우리 국내에 현재 있는 기술로서 확산모델을 한 거다 말씀을 하셔야지 왜 자신 없게 이것은 확산모델을 검증하기 위해서 한 거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모델을 검증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모델을 새로 고도화를 했으니까……

○안병길 위원 그것 고도화를 했으니까 이게 맞다고 주장을 하셔야지요!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모델 만들어 가지고 몇 년 동안 연구해서…… 이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연구가 시작된 겁니다, 결과가 이제 나왔지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그 데이터……

○안병길 위원 그 데이터가 제한적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그렇습니다.

○안병길 위원 그때 당시에요 이야기했잖아요, IAEA에서. 계속 우리 정부도 입장이 일본 보고 정확한 데이터를 더 내놔라 그렇게 요구하는 중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그렇습니다.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병길 위원 그런데 자꾸 TF에다가 미루고 이런 식으로 이 모델에 대해서도, 지금 이야기한 것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요.

이게요 우리 정부가, 어떤 정부든 간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갖다가 책임 안 지는 정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입장이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해수부 입장이 바뀐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아니, 없습니다.

○안병길 위원 윤석열 정부와 지금 해수부 입장, 정부의 입장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그렇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일본에 자료 요구하고 안전하지 않은 해양 오염수 방류는 반대한다는 명확한 입장 가지고 있습니다.

○안병길 위원 자, 다음 보십시오.

정의용 장관 이렇게 답변했어요, 국회 본회의장에 나와서 ‘여러 가지 여건이 마련되고 IAEA 기준의 적합성 절차에 따라서 된다면 저희가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반대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반대한다고 명확하게 밝힌 나라가 아니고, 지금 북한 입장도 철회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중국도 입장이 정확하게 정보·데이터를 내놓고 절차에 의해서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 입장이 무조건 반대 입장으로 견지한 적 있습니까? 오염수 방류 반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안전성 검증이라는 전제가 붙습니다.

○안병길 위원 그럼요, 국제사회하고 같이, IAEA하고 발을 맞춰서 같이 우리 정부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다 지당하신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안병길 위원** 그래서 좀…… 아니, 맞는 것은 맞다 하고 정부에서 아닌 것은 아니라 하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과학적인 검증이 나온 것을, IAEA에서 과학적인 검증, 우리가 자신 있게 내놓은 과학적인 검증 자체를 자신 없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대통령도, 윤 대통령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일본은 주변국에 투명하게 설명을 해라. 그리고 동의를 좀 받아라, 국제사회에’ 그런 입장이고 우리 TF나 정부의 공식 입장도 그 거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정부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제1번이거든. 그것은 윤석열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똑같아요. 그렇지만 위험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 지금 국민들이 제 생각은 과도한 불안감, 과도한 위험에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저는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 더 투명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일본에 IAEA랑 국제사회에서 더 검증 절차에 들어가고, 우리 정부도 대비를 하고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나와 있는 위험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후쿠시마 오염사고 나서 지금 우리나라 삼면의 바다에 방사능 오염 측정하는 곳 삼백몇 군데입니까? 지금 띄워 놔지 않습니까, 이번에 확대하고. 그다음에 일본에서 수입하는 수산물, 방사능 측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안병길 위원** 물고기 단 한 마리라도 방사능 오염 수치가 기준치보다 초과된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없습니다.

○**안병길 위원** 없잖아요. 이것을 국민한테 설명을 하라고요.

○**위성곤 위원** 방류도 안 됐는데 그걸 가지고……

○**안병길 위원** 아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거 한 그제 없어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수입 수산물……

○**안병길 위원** 수입 수산물도 그렇고 방사능 측정장치를 10년 동안 가동했는데 기준치 이상 우리 국내…… 거기서 2012년도에 방사능이 뺨 터졌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오염이 돼 가지고 우리나라에 곧 밀려온다고 난리굿을 했는데 우리나라 쪽의 방사능 오염 측정치가 바다가 오염됐다

는 그제, 기준치가 초과됐다는 게 단 한 번도 없다가요. 그런 걸 왜 설명 안 해요, 해수부에서 국민들한테.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투명하게 정보 공개를 수입 수산물에 대한 검증, 방사능 검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방류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더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검사 결과를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기준치 초과하는 사례는 전연 없었습니다.

○**안병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해수부 좀 더 적극적으로 위험에 대비해야 돼요. 그런데 자꾸 이 위험이 과장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국민들이…… 2012년도 후쿠시마 터져서 온 바다에 방사능 다 퍼부었어요. 지금은 그 오염수를 그것도 ALPS로 제거하면 64종 핵종이 거의 다 제거돼요. 딱 하나 안 되는 게 삼중수소예요. 그래서 삼중수소에 집중하는 겁니다. 다른 거는 문제될 게 없다고 이미 IAEA에서 판정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아까 삼중수소 왜 안 하냐고 질의하니까 그것도 우물우물하시고.

반감기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문제되는 오염수를 다 거르고 나면 삼중수소 한 개 그것도 10만분의 1, 다 거르고 나면—이거는 우리 결과가 나왔잖아요—1m³당 172Bq……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0만분의 1밖에 안 나오는 것 이것 가지고 지금 논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그러니까 IAEA의 ALPS 처리 결과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유보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그 검증 결과가 나오면 다시 시뮬레이션……

○**안병길 위원** 검증 결과가 몇 번 나왔습니다, IAEA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병길 위원** 아니요, 예전에 했던 게 다 있어요. 그걸 못 믿겠다 하니까 추가로 계속, 계속하는 거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병훈 안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당진시 어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구 위원 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어지구 위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도 문제인 정부 탓이에요? 후쿠시마 원전 방류도 문제인 정부 탓이냐고.

백하면 문제인 정부 자꾸 얘기하는데, 이거 일본 방사능 측정 대상을 64종에서 31개로 줄이고 정화장치 ALPS 파손된 게 문제인 정부 때 파손된 겁니까?

두 달 남았어요, 오염수 방류하는 거 두 달. 정부 어떤 대책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일본한테 항의 한 번 한 적 있어요, 정부의 공식 입장?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외교 채널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자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지구 위원 자료 요구했는데 자료 받아 본 거 있어요? 공식적으로 이거 정부가 나서서 반대 입장을 발표한 적 있어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반대 입장을 발표한 적 없습니다.

○어지구 위원 왜 안 해, 지금? 우리나라 가장 가까이 있는데. 다른 나라는 난리잖아, 지금.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입증, 그러니까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지구 위원 검증해 봤어요, 지금? IAEA에 있어요, IAEA에?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아니, 지금 검증 과정에 있지 않습니다.

○어지구 위원 IAEA도 원자력발전이 있는 나라들의 사교클럽입니다. 친원전 기구예요. 아시지요? 전 사무총장이 일본 사람이예요.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고 있어요? 안 했어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어지구 위원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문제인 정부 때 하던 거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 안 하고 있어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헌법재판소요?

○어지구 위원 제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아, 국제……

○어지구 위원 국제해양법재판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그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

○어지구 위원 맨날 검토만 하고 있습니까, 이거 두 달 남았는데?

지금 범정부 TF팀 하고 있다는데 뭐 했어요? 누가 참석했어요? 차관님이 참석했어요, 차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그거는 국무차장 주재로 해 가지고……

○어지구 위원 국무차장 갖고 돼요, 각 부처 장관들이 해야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국장들이……

○어지구 위원 국장 갖고 되냐 말이에요, 국장 가지고!

TF팀 한 번 한 적 있어요, 열린 적 있어? 하나도 앓고서 무슨 지금……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TF팀 계속……

○어지구 위원 국민들만 난리야, 국민들만 지금.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어지구 위원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다고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어지구 위원 진짜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실무 TF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지구 위원 자료 좀 다 갖다 줘 보세요. 범정부 TF팀 뭐 열렸는지, 무슨 얘기했는지 한번 갖다 줘 보시라고. 해경 때문에 지금 열 받아 죽겠는데…… 그거 다 자료 갖다 주세요.

피해가 얼마인지 다 검토해 보셨어요, 지금? 수산물을 국민들이 먹겠어요, 두 달 후에 방류하면? 그게 안전하면 말이에요 일본에 저수지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갖다 하고서 거기서 수상스키도 하고 그러라고 그래요. 왜 밖에다 바닷물에 방류합니까? 안전하니까 그거 갖다가 저수지 만들어, 저수지. 저수지 파서 거기다 갖다 해 놓으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이걸 항의를 안 해요? 항의 않고 맨날 싸움 시켜, 자꾸 여기다가!

○윤미향 위원 그거 땅에다 묻어도 돼요.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 하는 거예요.

○어지구 위원 땅에다 묻든지.

해경청장!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어지구 위원 인재개발원 입지 선정 용역해 놓고 발표 왜 안 합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지난 8월부터 계속 용역을 수행 중에 있었습니다.

○어지구 위원 뭐가 수행 중이야, 지금. 다 끝났

잖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중간용역을 각 위원들이 검토해 본 결과 여러 가지 사업이 무산되지 않도록 필요성하고 타당성이 좀 많이 보완되어야 된다……

○어기구 위원 장난치지 말고, 내가 다 알고 있는 정보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타당성 또 조사합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입지에 대한 200여 개가 넘는 훈련장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서 수치화하고 계량화가 필요하다……

○어기구 위원 일단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내 봐요, 주세요 한번. 타당성조사 또 할 게 뭐가 있나 내가 볼 테니까.

이거 자체 예산으로 2021년도에 연구용역 끝냈지요. 그때 뭐 했어요, 그때 연구용역 자체 예산 가지고? 2021년도에 한 연구용역?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설립에 대한 어떤 부분이나 교육에 대한 수요……

○어기구 위원 다 했어요. 인재개발원 설립 필요성 조사한 거 아니에요.

작년에 정부 예산 가지고 정식으로 1억 들여서 또 했지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한 8000여만 원 정도……예.

○어기구 위원 그럼 다 끝났잖아, 연구용역. 돈 다 지불했지요, 연구기관에?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지불은 아직 다 안 됐습니다.

○어기구 위원 아니, 계약기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계약기간은 2월까지입니다.

○어기구 위원 2월까지?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위원님 중간용역을 받아 보니까 좀 부족하고 사업이 전체적으로……

○어기구 위원 아니, 나도 정부 연구용역을 많이 해 봤어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계량화, 수치가 너무 좀 부족하다라는 게……

○어기구 위원 부족하면 그러면 연구용역을 발주한 그 담당자 징계했어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어기구 위원 징계했냐고, 담당자.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요.

○어기구 위원 업무를 지금 잘못 보는 거 아니에요. 2년, 2월 달까지 하는데 지금 용역보고서 안 내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좀 탄탄한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예산 당국이나 행안부에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기구 위원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해경 연수원 짓는 것도 이거 정치권에 휘둘릴 거예요, 지금? 해경이 정치 조직입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위원님, 사업 자체가 무산되지 않도록……

○어기구 위원 내가 다 얘기해 볼까, 지금?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탄탄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기구 위원 탄탄하게 준비…… 언제 발표할 거예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추가 용역을 썼기 때문에……

○어기구 위원 언제까지 할 거냐고, 추가 용역 언제까지.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용역을 수행하는 기간이 그 일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언제까지다라고 명시적으로 말하기가 조금……

○어기구 위원 이거 맨날 연구용역만 하다 끝나, 그러면? 기간을 줘야 될 것, 기간을 지금 2년 동안 했는데……

○윤준병 위원 기간이 있는데 왜……

○이원택 위원 연구용역 줄 때 3개월이든 2개월이든 정해 주잖아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용역 기관에서 300일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어기구 위원 이거 말도 안 돼, 지금.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저희들이 독려해서 좀 빨리 마무리……

○어기구 위원 해경은 영원한 거예요. 정권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정치권한테 휘둘러 가지고 되겠냐고!

○윤준병 위원 해경청장 답변을 이상하게 한다.

○이원택 위원 조금 클리어하게 답변을 해 줘야지. 연구용역할 때 과업지시서 기간이 있잖아요. 그걸 얘기해 줘야지. 3개월 후다, 6개월 후다 이렇게……

○어기구 위원 지금 용역 다 끝난 거 아니야,

두 차례 용역 끝났고. 왜 발표를 안 해?

오늘 경력 보니까 교육원장도 하셨더라고요. 해경 인재개발원 필요 없어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필요합니다.

○여기구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미적미적 됩니까. 결과 나왔으면 해경은 발표하면 됩니다, 투명하게. 뭐 이렇게 휘둘러요. 여기 정치, 정권 실세가 개입돼 있습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당초 용역비에 비해서 용역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여기구 위원 나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내년 총선 끝나고나 발표한다고 그래요. 총선하고 연수원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위원님 그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여기구 위원 나한테 와서 보고했다니까, 담당이.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어느 담당이 보고를 했단 말입니까?

○여기구 위원 용역 담당이 와서……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위원님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여기구 위원 내년 5월 달에 발표한다고.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여기구 위원 언제 발표할 거예요, 그러면? 얘기해 봐요, 한번.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용역 기관이 추가로 300일이 필요하다는데……

○여기구 위원 300일이 필요하다고, 용역 기관이? 뭔데 필요해, 지금?

○이원택 위원 추가 용역이 300일이 필요해요, 본용역도 아니고?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연구기관에서……

○위성곤 위원 용역비가 뭐 300억짜리쯤 돼요?

○여기구 위원 완전히 이거 정권에 휘둘러 가지고 해경이 그러면 되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공모해 놓고 말이지, 지난번 중부청 할 때도 그냥 수차례 공모해 놓고 말이야 뒤통수치고……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위원님 저희들 독려해서……

○여기구 위원 이번에 또 그렇게 지자체들 다 꿀탕 먹일 겁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독려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구 위원 해경 찾아가고 말이야, 현장 실

사 나와서 다 그냥 가서 하고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장난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언제 발표할 거예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준비를 잘해서 저희들이……

○여기구 위원 준비 잘하기는 지금 다……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용역 기관에다가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저희들이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구 위원 언제까지 할 거냐고요, 언제까지.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저희들이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용역 기관에다가 저희들이 권고를……

○여기구 위원 연수원 짓는 것도 무슨 정권에 휘둘러 가지고 그렇게 별별 떨고 그래. 해경 힘이 없어요, 해경이?

이따 자료 받아보고 또 2차 질의 할 테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병훈 여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표 위원 우리 야당 위원님들 너무 막 그냥 같이 떼거리로 협박하고 하지 마세요, 살살 질문해. 그래도 다 알아듣는데 살살하면 되지 왜 그렇게 막 욱박질러요.

○위성곤 위원 연구용역을 맡기는데 두 달짜리 했는데 300일이 더 필요한데 그렇게 답변하는 걸 아무리 도와줘도 그것까지 도와줍니까?

○윤준병 위원 무슨 협박이야, 제대로 답변하라는 얘기지. 뭘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홍문표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어 위원이 하면 되는 거지 왜 자꾸 옆에서 그래. 질문을 그렇게 하면 산만해서 위원 질의가 안 된다고.

○안호영 위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니까 하는 말이잖아요.

○홍문표 위원 어 위원이 하시면 되잖아요.

○위성곤 위원 어이없는 답변하는데 지금 해야지.

○홍문표 위원 그러면 다음에 하시든지…… 그거 남이 질의하는데 대들고 그래요.

○윤준병 위원 그렇다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위원장 소병훈 그래요. 질의하는 동안에는 다른 위원님들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표 위원** 보다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점잖게 할 수 있잖아요.

○**윤준병 위원** 점잖게 하시는데 말씀이 그게 됩니까? 아무리 그래도 떼거리로 협박하다니요.

○**위원장 소병훈** 윤준병 위원님……

○**홍문표 위원** 자기 발언에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어 위원 하시는데 왜 자꾸 옆에서 그렇게 해요.

○**위원장 소병훈** 잠시 멈추시고……

○**윤준병 위원** 잘못하니까 지적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떼거리로 협박하다니, 그게 말씀이 됩니까?

○**홍문표 위원** 그러니까 질의를 본인이 할 때 하란 말이야, 본인이. 본인이 할 때 하면 되잖아요.

○**윤준병 위원** 본인도 할 거예요, 저도.

○**홍문표 위원** 그렇게 하면 되잖아.

○**윤준병 위원** 아니, 할 거라고요.

○**홍문표 위원** 그러니까 왜 그 옆에서 얘기를 해.

○**윤준병 위원** 그런데 왜 그게 떼거리로 협박한다는 말씀을 하세요.

○**이원택 위원** 지금까지 옆에서 한마디씩 다 거들었잖아요.

○**위원장 소병훈** 자, 이제 그만하시고요.

○**홍문표 위원** 한두 명이 하면 되지 전부 들어와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윤준병 위원** 뭘 그걸 가지고 떼거리로 협박을……

○**위원장 소병훈** 윤준병 위원님 그만하시고……

○**윤준병 위원** 잘못해서 지적하는 건데.

○**홍문표 위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국회예요.

○**윤준병 위원** 국회니까 그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홍문표 위원** 본인 질의 때 하시라고.

○**윤준병 위원** 아니, 질의 때 할 건데……

○**홍문표 위원** 그거 하면 되잖아, 그러면.

○**윤준병 위원** 제대로 답변하라고 촉구하는 것 그걸 떼거리로 협박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홍문표 위원** 촉구를 왜 하느냐고, 어 위원이 하고 있는데 어 위원이 하면 되지.

○**윤준병 위원** 제대로 답변하라 촉구하는 건데.

○**홍문표 위원** 그거는 본인이 할 때 하시라고, 본인이.

○**윤준병 위원** 아니, 제가 할 때도 할 거예요.

○**홍문표 위원** 그렇게 하면 되지, 왜 그러면 어 위원이 하는데 그래?

○**이원택 위원** 그러면 저 옆에서 거드는 정희용 씨도 조용히 있어야지.

이렇게 한마디씩 응원해 주는 거지.

○**윤준병 위원** 아니, 지금 뭐예요?

○**홍문표 위원** 뭘 뭐예요? 말을 똑바로 해야지.

○**윤준병 위원** 뭘 똑바로 해? 지금 옆에서도 똑같이 하는구먼.

○**위원장 소병훈** 윤준병 위원님이 잠깐……

○**윤준병 위원** 그러면 지적하세요.

○**정희용 위원** 그렇게 안 하는 게 정답이지요.

○**홍문표 위원** 그렇게 떼거리로 하지 말아요.

○**위원장 소병훈** 윤준병 위원님!

○**이원택 위원** 그냥 한마디씩 거드는 거지, 그게.

○**위원장 소병훈** 윤준병 위원님, 잠깐 멈춰 주시고.

홍문표 위원님은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홍문표 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본인 개인 질의가 아니잖아요.

질의하겠습니다.

후쿠시마현 원전 사고 지금 12년 됐지요, 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홍문표 위원** 우리 정부나 또 과거 정부가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이 그냥 미적지근하게 계속 조사한다 뭐 한다 이러다 보니까 오늘의 이와 같은 사태가 계속 오고 있는데 이건 내 생각이고 또 국제 관례상 몇 가지 내가 실례를 보니까…… 지금 탱크가 일본에 몇 개나 있어요, 원전 사고 이후 탱크 지금 묻혀 있는 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문표 위원** 이게 1000개가 넘어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보관하고 있는 것 같이 이번에 이것도 탱크를 증설하라고 일본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국제회의에서라도, 이 문제를 유엔에서라도 얘기를 하세요. 왜 맨날 우리끼리 앉아서 티격태격합니까? 두 번째는 호수라도 만들라고 그러세요.

아까 어 위원이 일부 지적을 했는데 이 탱크 증설 문제 저희들이 볼 때는 한 100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있는 게 1066개가 있거든. 거기다 한 100개 더 증설하라고, 일본 돈 많은

나라인데 왜 이거 못 해. 그리고 호수를 만들어서라도 대책을 세우라는 얘기를 왜 우리가 못 합니까?

과거 정부가 이런 얘기 해 본 일이 있어요? 또 지금 정부도 이거 앞으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과거 정부나 지금 정부나 똑같으면 지금 정부 있으나 마나지. 과거 정부 못 했다 하더라도 지금 정부는 이걸 하시킨 말이에요. 장관이 그냥 앉아서 ‘예, 예’만 해 갖고 되겠어요, 이게?

이게 대안으로 저는 하나, 자구책으로 내가 국제 이 분야의 전문가분 얘기를 들으니까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홍문표 위원 두 번째는 해경청장!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홍문표 위원 아까 이야기를 내가 들으니까 참기가 막히는데 ‘해경이 경비를 강화한다. 위성 정보, 항공기를 갖고 정보를 교환해서 국민 안전을 한다 또 외국어선 불법 조업하는 걸 차단을 하겠다. 해경이 우리나라 해양영토 관할권과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겠다. 마약범 단절하겠다. 환경보호……’, 지금 보고한 것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지금 임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문표 위원 이거 작년 얘기나 지금이나 똑같아. 내가 작년 거를 아침에 보기만 하고 오늘 못 갖고 왔는데 거의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정권이 바뀌었으면 바뀐 것답게 해야지 과거에 이렇게 우물쭈물하고 넘어가고 눈치 보느라고 못 한 거 지금 똑같이 이 정부가 할거예요?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내가 몇 가지만 지목을 할게요. 과거 정부에서 어민 숫자가 10만 3000명 되던 게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9만 4000명으로 줄었잖아요. 왜 줄어야 돼요, 이게? 내가 과거 정부를 탓하는 게 아니라 이걸 반복하면 이제 5만 명, 3만 명으로 줄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두 번째, 불법 조업 중국에서 1.8배였는데 지금은 1.9배가 돼 버렸어요. 그리고 어업 소득 감소는 26%에서 지금 17%로 떨어졌다고. 그동안 연근해에서 생산되고 있는, 우리가 한 150만t 봤는데 지금 이게 75만t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다음에 수산물 자급률 우리가 72.5%였는데 이제 68%로 떨어졌거든.

그러면 다섯 가지만 보더라도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이것을 이제는 무언가 대책을 윤석열 정부에서 하려는 그 의욕을 오늘 보고하셔야 되는데 전부 다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잘하겠다고만 했는데 뭘 잘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나날이 세상이 바뀌고 우리 국가의 민도도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행정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그러면 국민이 뭘 우리를 새롭게 보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시간이 없어 깊이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마는 불법 어업 어획 지난 정부에서 갖고 있던 게 얼마인지 아세요? 불법 어획 지금 확보해 놓은……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전체적으로 중국 어선 관련해서 한 670억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한 510억 정도 저희들이 담보금으로……

○홍문표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내가 이 법안을 낸 것 아세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두 가지 법안……

○홍문표 위원 그런데 지금 노력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것 어민에게 돌려줘야지 왜 정부가 씹니까? 어장은 어민의 생활터전이고 먹고사는 삶의 터전이고 그리고 영해는 국가가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국가가 이 돈을 갖다가 쓰느냐고. 이것 안 돼요. 이것 얘기를 강하게 하세요. 과거의 정부가 그랬어도 이제 이 정부는 다르다 해서 이런 부분도 어민에게 돌려주자는 말이에요. 왜 이걸 해경청장이 못 합니까, 장관하고? 이것 단호한 조치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얘기를 하시는지 저는 나름대로 지켜볼 겁니다.

그다음에 참 이게 부끄럽고 창피한 얘기인데 허베이스피리트 사건, 태안 기름 유출 사건 아시지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홍문표 위원 그것 3600억 받았는데 현재 얼마 있습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잔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홍문표 위원 2000억 남아 있는데 지금 1600억이 어디로 갔냐는 말이에요. 이게 말이에요 본래 어민들에게 이걸 기금으로 만들어서…… 그때 내가 위원장을 했어요, 특별위원회 위원장. 삼성에서 그 안 내놓는 돈 우리가 가서 항의하고 별짓다 해서 돈 3600억 받아 났는데 이게 중간에 운

영비로 1600억을 쓰고 2000억 남아 있다고, 지금. 그게 은행에 지금 저금되어 있지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문표 위원 그러면 왜 이것 어떻게 쓰려고…… 이것도 그냥 운영비로 다 없앨 겁니까, 어민들한테는 안 돌아가고?

이것 책임지고 장관님하고 둘이 상의해서 해결 방법 다음에 보고를 해 주세요.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장님, 정유업체 북한에 경유 불법 공급하다가 적발된 것 몇 건인지 아세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전체적으로 약, 이번까지 지금 한 3건 정도 됩니다.

○홍문표 위원 3건?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적발된 것만 저희들이 인지한 건 한 3건 정도 됩니다.

○홍문표 위원 지금 그렇게 무능하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지금 전부 여기에 체크된 것이 열한 번인데, 해경이 바다를 지키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기름을 이렇게 북한에 넘어가게 놔두고 보고 있습니까? 보고 있는 건 아니겠지, 무슨 대책이 없는 것이지. 눈 뜨고 그냥 보고 있는 거지.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장소적 한계가, 저 외국 쪽 공해상에서 뱅커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홍문표 위원 그러니까 불가항력이다, 도저히 어렵다 이런 건데……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불가항력은 아니고 관련 정보를 외교부로부터 저희들이 받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홍문표 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나라 정유가 북한에 넘어가도 괜찮아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문표 위원 그렇지 않다면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외교부에서 유엔이라든지 다른 정보가 입수되면 저희들이 관련 업체를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홍문표 위원 여기에 대한 것도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 주세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홍문표 위원 그다음에 마약도 마찬가지로입니

다. 마약은 몇 건이나 잡았어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저희들이 작년에 한 294명 정도 검거를 했습니다.

○홍문표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도 200명이 넘는데 지금 무방비예요. 육지로 들어오기 어려우니까 지금 해안으로 들어오거든.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마약 거래, 지금 우리 기름 북한에 유출되고 있어요. 이런 것 해경으로 다 넘어가고 있다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다음에 보고 해 주세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문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병훈 홍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 서귀포시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장관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안전합니까? 안전해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아직까지 안전하다 안 하더라도 지금 이야기하기는 곤란한……

○위성곤 위원 아니, 이제 방류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도 그 판단을 안 하고 계시면 국민들의 생명은 누가 지킵니까, 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IAEA 검증 결과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IAEA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 생명은 IAEA를 믿고 국민의 국방은 어디에 맡겨 놓으면 됩니까? 미군에 맡겨 놓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민들은 미국 해수부에 맡겨 놓으면 되겠네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오염수의 일방적인 해양 방출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분명한 반대 입장인데 반대 활동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앞서 이번 세미나, 학회를 한 이유가 모델 고도화 테스트를 위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시기에 왜 그것을 발표하신 거예요, 정부의 공식 발표도 아니고? 일본 오염수가 안전하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 학회를 연 것 아니에요, 그리고 국민들께 설득을 하고 있는 거고?

앞서 질의하신 여당 위원님께서서는 ‘왜 그런 사실을 제대로 잘 안 알리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안전한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병길 위원** 안전하다고 이야기 안 했어요.

○**위성곤 위원** 뉘앙스는 그렇지요.

○**안병길 위원** 뉘앙스가 어디 있어요, 그 말을 안 했는데.

○**위성곤 위원** 안 했지만 저는 그렇게 들려서요.

○**위원장 소병훈** 안전을 확인하고……

○**위성곤 위원** 가장 큰 문제가 도쿄전력과 IAEA가 안전하다고 하는데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거예요. 정보 보신 적 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결과가 나오면 공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결과가 나오면 언제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결과가 저는 3월 이전에는……

○**위성곤 위원** 장관님, 이미 일본도요 절차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도 하고 모든 데이터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18개 섬·연안 국가에서도 받는 정보·데이터를 우리 민간인들은 받고 있지를 못해요. 도대체 외교를 어느 정도로 하고 있기에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학자들에게 삼중수소 결과에 대해서, 도쿄 오염수 현장 가서 시료를 채취하고 그 채취된 시료를 받은 과학자가 있는지 아십니까? 있습니까, 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계속 정부에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성곤 위원** 안 주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위성곤 위원** 결국 일본 말 믿으면 된다 이 말 이잖아요. 믿으면 되는 겁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게 그런 겁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지금 검증 과정에도 참여하고 있고……

○**위성곤 위원** 그 검증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분은 가서 검토만 하는 거고요.

페렌 달노키베레스(Ferenc Dalnoki-Veress)라는 과학자가 지난번 저희 의원실에서 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해외 초청 토론회에 와서 불완전하고 부적절하고 일관성 없는 데이터 표본 추출이 문제이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다섯 분의 학자가 받아 봤더니 데이터가 엉망이더라, 이 데

이터 가지고 이 결과를 냈다면 이걸 믿을 수 없다, 결론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류가 아니라 투기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과학자들은 정보를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장관님, TF 회의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몇 번 하셨어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실무 TF 회의는 수차례 했습니다. 제가 세 보지는 않아 가지고……

○**위성곤 위원** TF 참석하시는 담당 국장님 계시지요? 잠깐 일어나 보세요.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관 정도현** 해양환경정책관입니다.

○**위성곤 위원** TF 회의 올해 들어서 몇 번 하셨습니까?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관 정도현** 한 세 차례……

○**위성곤 위원** 세 차례 회의한 것 맞아요?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관 정도현**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국장단 회의인가요?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관 정도현** 예, 국무차장이 주재하고 관계 부처 국장급이……

○**위성곤 위원** 국무차장이 주재하고 국장들이 모여서?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관 정도현** 예.

○**위성곤 위원** 그래서 일본 정부에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TF에서는?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관 정도현** TF에서는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위성곤 위원** 점검만 하는 거지요?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관 정도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니까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관 정도현** 관련 상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앓으세요.

지금 국회가 요구하고 있는 데이터의 공개 그리고 해양협약에 의한 국제재판소 제소, 최소한의 잠정조치 이런 논의는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최소한 국민들께 이것에 대해서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려면 기본적인 데이터는 확보하시고 정부가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검증 결과가 나오면

추가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아니, 시료도 못 받는 분이 데이터 받아서 뭐 하시게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검증된 데이터를 받아서……

○**위성곤 위원** 검증된 데이터라는 것은 일본이 제공하고 있는 통제되어진 수치만 받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위성곤 위원** 우리가 배출하는 것은 삼중수소가 이만큼 있다, 그걸 본 적도 없는데 믿고 시뮬레이션하고 그 시뮬레이션 결과가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국민이 어떻게 정부를 신뢰하겠습니까?

해경청장님!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위성곤 위원** 해경 연수원 용역 관련해서 2022년도에 정부 예산 1억 원 편성하셨지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게 일몰 사업이지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2022년 종료가 되는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금년 2월 16일까지가 계약 기간입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요. 우리 회계상 2월 말까지 업무 수행해서 올리면 되는 거예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종료를 받아야 돼요. 아니, 그런데 용역진에서 이 연구용역을 하는 데 300일이 필요하냐?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금년 말까지가 더 필요하다, 추가로 계량화 분석이라든지 지표에 대한 수치를……

○**위성곤 위원** 잠깐만, 해경 연수원을 설립하는데 무슨 계량화를 하시는 거예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설립에 대한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더……

○**위성곤 위원** 1억 원짜리 용역을 하는데 계량화 모델을 개발하는 거예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아닙니다. 중간용역 한 걸 위원들이 보니까 너무 부족한 게 많아서 좀 더……

○**위성곤 위원** 그러면 용역기관에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1억짜리를 하는데 기술을 개발

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데이터를 모아서 타당성만 검토하는 건데 세상에……

관련해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련 자료를요 지금까지 취합하고 있는, 일단 중간보고서를 받았을 테니까 중간보고서를 포함해서 자료제출을 상임위 차원에서 의결해서 받았으면 합니다. 도저히 청장의 얘기를 믿을 수가 없어요.

○**위원장 소병훈** 의결 전에 제출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위원이 요구하면 그 자료제출이야 의결이 무슨 필요가 있어.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제출할 수 있는 것은 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성곤 위원** 아니, 앞서는 못 한다고 얘기를 해서……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제출할 수 있는 것은 다 해 드린다고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어떤 걸 하실 거예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실무자들한테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그리하게 되는 거고요.

○**위성곤 위원** 위원한테 답변을 하겠다고 해 놓고 또 실무자한테 물어봐서 실무자가 안 된다는 건 안 되고 되는 건 된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서류가 어디까지가……

○**위성곤 위원** 해경청장!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위성곤 위원**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소병훈**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용 위원** 경북 고령·성주·칠곡의 정희용 위원입니다.

해경청장님!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정희용 위원** 지금 앞서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해양경찰 인재개발원 이것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용역을 했는데,

용역 중간결과가 나왔는데 주변에서 보니까 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추가로 더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그렇습니다.

○정희용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중간용역 보고가 부실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 부실하면 그런 용역사 다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다 이상하게 생각하지않아요, 또 이런 사례가 흔치 않고.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보고서를 좀 탄탄하게 할 필요성이, 필요성과 타당성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위성곤 위원 10년 하세요, 10년.

○위원장 소병훈 다른 위원님들은 조용히 해 주십시오.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용 위원 이런 의구심을 안 가지도록 말씀을, 답변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 우물쭈물 그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하시고, 잘 모르시면 그 담당자한테 정확한 의견을 들어서 가지고 정확하게 설명을 하세요. 이것 국민들 지켜보시는 분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잘 알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여당 위원으로서 답답하잖아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알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자료 있으면 빨리 충분히 드리고 이런 지적 안 받으시도록 하십시오.

그런데 안타까운 사고인데 신안군에 청보호 전복 사고 있어서 열두 분 중에서 세 분은 다행히 구조를 했고 다섯 분은 안타깝게 돌아가시고 지금 네 분은 아직도 실종 상태인 거지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네 분이 지금 실종 상태입니다.

○정희용 위원 수색은 계속하고 있습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경비병행해서 지금 해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럼 이것 정밀조사는 했는데 아직 원인 분석까지는 안 된 거지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4차에 걸쳐서 감식은 했고 나머지 관련 자료 국과수에서 회신이 오면 종합적으로 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할 예정입니다.

○정희용 위원 원인 분석이 되는 대로 저희 의

원실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고.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그러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 원인이 나오면 재발방지 대책까지 같이 나와야 될 거지 않습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정희용 위원 그 부분까지 같이 정리해서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썩썩하게 대답하세요,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

장관님, 오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문제 계속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큰 갈래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방류를 못 하도록, 우리가 여러 기술적인 이야기들은 앞서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저수지를 만든다든지 지하에 묻는다든지. 못 하도록 다른 대안을 제시하면서 요구하는 방법, 두 번째는 일본에서 계획대로 방류를 한다면 일본 정부를 신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계획 말한 대로 할 건지 또 중간에 검증 결과가 약속대로 정확하게 모든 걸 오픈한 건지, 이게 신뢰도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일본에다가 방류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들,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이 부분들을 일본한테 요청을 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여러 갈래를 통해서 지난 정부에서부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희용 위원 국민들이 보고 계시고, 예를 들면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요구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일단 가까이에서 저희 해수부 같은 경우에는 유엔해양법협약…… 런던협약은 해양 투기에 관련된 협약입니다. 그 협약에서 분명하게 방류 외에 다른 방법을 찾는 게 맞다, 방류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저희들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항의하고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정희용 위원 우리 정부가 이렇게 일본한테도 강력하게 그런 요구를 했다라는 것, 하고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 편의를 우리가 봐주고 그럴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정희용 위원 그래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또

한국원자력연구원 공동으로 발표한 삼중수소 확산 시뮬레이션 이게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이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발표되고 나니까 각종 언론에서 전문가한테 이 결과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뉴스를 보면 어떤 전문가는 일본의 정보를 신뢰한다면 이 정도 수준이면 기존의 바다에 있는 삼중수소 농도에 극히 미미한 수준이니까 영향이 없을 수 있다고 인터뷰하는 분도 계시고 이것도 불안하니까 일본에서 방류를 못 하도록 해야 된다고 아직까지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고 이렇습니다. 동시에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 뉴스를 보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미미하지만 방류가 돼서 삼중수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국민들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고 또 다른 전문가는 이렇게 묻고 저수지 만들고 하면 되는데 왜 굳이 방류해서 이렇게 해야 되나라고 하고 우리 어민이 나와서 분개하는 인터뷰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것 딱 보면 국민들이 다 걱정하는 거지요, 어민들 삶은 그렇고.

그런데 이것을 국내 전문가들도 불러서 해수부하고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대안이 있다는 것은 원론적으로 주장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이야기한다고 해도 일본 정부가 안 들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있다. 그런데 일본 정부하고 협상도 안 되고 일본 정부 받아들이지도 않는 안을 가지고 국민들한테는 호소하는 거예요. 국민들은 그걸 믿어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우리 해수부는, 우리 정부는 왜 가만히 있냐.

그 인터뷰에 나온 전문가들을 불러서 지금 해수부가 어떻게 대응을 했고 그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일본 정부에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 이 부분까지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 전문가의 생각이 틀린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반영이 안 되는데 그 주장을 계속하게 두면 불안감만 증폭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해수부도 그 주장을 일본 정부에다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경로로든지 간에. 같이해야 되겠지요. 동의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정희용 위원 두 번째는 신뢰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계속 말씀하시는데 64개 방사성 핵종이 있

는데 삼중수소만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안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맞는 겁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삼중수소를 아까 선택한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침강이나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고 우리나라 해역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핵종이기 때문에 지금 그걸 가지고 테스트를 했고요.

○정희용 위원 그런데 여기서 야당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일본 정부를 신뢰한다면 이 전제가, 그걸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왜 이거 삼중수소만 하느냐, 그러면 다른 것은 ALPS인가 그걸 통해서 다 걸러냈다고 하는데 걸러내진 게 맞느냐, 그리고 나중에 추후 방류할 때 진짜 계획대로 방류할 거냐, 이게 불안하니까 지금 계속 확인하고 확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할게요.

그래서 그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거냐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그것은 검증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우리 연구자들이나 시료 상호 채취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용 위원 세 번째로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받은 정보를 통해서 그렇게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러면 타국들, 인근의 중국 또 태평양 연안의 미국·캐나다, 관련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국가에서도 이런 유사한 연구를 일본에서 제공한 정보에만 의존해서 발표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발표한 사례가 있고요. 거기서도 역시 삼중수소를 가지고 했고 저희하고 비슷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희용 위원 미국이나 캐나다는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정희용 위원 장관님, 그것 확인 안 하시면 안 되지요. 다다음 달에 방류한다는데 타국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어떤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일본 정부에 어떻게 요구했는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걸 알아서 우리가 미비한 점이 있으면 우리도 강력하게 항의할 건 항의하고 시뮬레이션에 빠진 게 있으면 추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알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존경하는 홍문표 위원님 자리에 안 계시는데, 홍문표 위원님께서 지금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보다 나은 정부가 되어야 되고 해수부나 해양청도 더 나은 역할들을 해야 된다, 그래야 발전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저는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질의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체감하고 있는 내용은 그렇지 못하다 이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양청장께서 해양청 인재개발원 용역과 관련된 내용도 이렇게 부실하게 답변하고 부실한 대응을 하는 것 자체는 행정의 A·B·C도 없는 조직처럼 보인다. 용역이 수행됐으면 용역 결과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만약에 부실한 부분이 있었다,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얼마의 용역을 기간을 명시해서 줬다. 용역 기간도 적절해야 돼요, 보완하는 내용이.

어떻게 본용역이 1년짜리인데 용역 기간을 300일을 줘서 보완 지시를 하고…… 그러면 부실 용역이었으면 그거 중간에 용역을 타절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하면, 그런 조치도 안 하면서 은근슬쩍 자료도 제출 안 하고 이런 행정이 전 정부보다 나은 행정입니까?

또 해양청 최근에 인사 있었는데 요새 승진하는데 해양청 내에 여전히 상납 관행이 존치합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언론에 나와서 실명 대고 인터뷰하고 그러는데 없다고 그래요? 조사해 봤어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사실관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조사 중인데 어떻게 없는 걸로

알아요? 본인이 상납했다고, 관행이 있다고 상사에게 선물을 갖다 줬노라고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조사도 안 끝났는데 해양청장이 없다 단언할 수 있어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당사자가 부인하고 있고,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엄중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반성하셔야지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윤준병 위원 또 인사를 하는데 원래 인사는 순차적인 인사를 하는 게 원칙이지요, 위에서부터?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총경 이하는 정기가 있고 위에는 정기 또는 부정기로도 할 수 있어……

○윤준병 위원 부정기인데 통상의 경우에는 청장부터 순차적인 인사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청장 이후의 예가……

○윤준병 위원 이런 원칙도 안 지켜져요. 이게 예전 정부보다 잘하는 정부입니까?

또 해양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육상과 달리 해양은 소방 기능까지 사실상 담당하고 있잖아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그렇습니다.

○윤준병 위원 수사력도 중요하지만 구조 역량도 중요하고. 그런데 전북 선박 인명구조 강화 방안, 작년에 이것 만들어서 매뉴얼까지 지금 만들어 운영하고 있지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그렇습니다.

○윤준병 위원 왜 이거는 비공개로 유지하나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내부적으로 시달되고 훈련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비공개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것 비공개로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이게 비공개되어야 될 이유를 모르겠어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관계기관 합동이라든지 실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러니까요. 확인해서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으면 그것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해수부장관님, 어선들 위치발신장치 이것 제대로 작동되고 있나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어민들이 끄는 경우도 발생……

○윤준병 위원 이것 왜 만들어요? 이런 걸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그렇습니다.

○윤준병 위원 이게 필요해서 부착 의무화시키고?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윤준병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해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으려고 위치발신장치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해난사고나 이런 대응 능력을 강화시키는 건데 이게 아직도 제대로 작동이 잘 안 돼요. 이것 점검해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개선 방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예전보다 나아지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 국감 때도 지적하고 매년 지적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안 돼요. 이걸 잘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또 우리 바다는 대부분 공유자원이잖아요. 공유자원의 경우에는 공동의 강제적 규칙이 없으면 많은 사람들이 무임 승차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파괴될 수밖에 없다, 이게 공유지의 비극 이론이지요. 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윤준병 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물을 정해서 사회의 불경계를 유발하는 규칙 위반자들 정상적인 물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내는 것 이게 중요한 역할 아니겠어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그렇습니다.

○윤준병 위원 바다의 낚시객들 불법 쓰레기 투기하는 것 이것 매년 지적되고 해양 오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문제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 부분이 제대로 정리 안 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윤준병 위원 봄철 성어기 아마 바다낚시 또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들 강구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낚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성어기의 해양쓰레기 투기나 이런 부분들은 단속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아니, 의례적으로 하는 말씀 말고 실질, 실효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대책 강구

하고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 조치들은 있습니다마는……

○윤준병 위원 그러니까 있으면 금년 봄철 성어기 제대로 단속해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위원님한테 별도로 다시 한번 제가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윤준병 위원 또 육상에서는 교통의 음주 운전 이게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는 음주 운항 이 문제가 심각해요. 이것을 그냥 개인적인 사고로 보고 계고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윤준병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엄격한 단속 규정이 필요하고 뒷받침이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저도 입법적인 발의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제도적인 보완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단속 계획이나 제도적인 뒷받침 또 개선 노력, 이런 게 뒷받침됐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알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위원장 소병훈 윤준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포천시가평균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식 위원 최춘식 위원입니다.

장관님, 후쿠시마 원전 문제만 가지고도 아마 오늘 업무보고 다 끝날 것 같은데요.

지난해 12월 22일 날 윤석열 정부가, 민주당이 한 얘기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을 들으신 적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최춘식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 일본 편드는 것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없고요. 지난 21년도에 문제인 정부가 제소 방안에 대해 가지고 국제 로펌의 자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것도 기억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언론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최춘식 위원 보셨지요? 여기에 그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앞으로 예상되는 피해를 입증할 법적 근거 자료가 부족하다, 과학적인 증거가 없다, 비슷한 국제 재판 사례가 없다는 아니고 드물다’. 결과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낮다라고 평가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장관님께서 특별히 의견을 피력하신 적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국감 때인가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의견 표시는 한 적이 있습니다.

○최춘식 위원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일본을 선제적으로 제소하려고 하는 실무 업무를 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적은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춘식 위원 없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최춘식 위원 그러면 실제로 추진한 적이 없단 말이지요.

그리고 작년도에 윤석열 정부는 이것을 제소해야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뚜렷한 자료가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승패가 결정 나는 것 아니겠어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최춘식 위원 만약에 여기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자료가 부족해 가지고 일본하고 재판했다가 지게 되면 어떤 효과나 결과가 오게 됩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결국은 정당화해 주는.....

○최춘식 위원 일본의 명분을 세워 주는 결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그렇습니다.

○최춘식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제소를 할 때 우리가 어떤 때인지 결정을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그렇습니다.

○최춘식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자기들 자국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응징하기 위해 가지고는 정말 철저한 자료 수집과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제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일본 방출 계획의 위해성이라든지 해양법상의 준수 의무 위반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소송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춘식 위원 그래서 잘못 제소했다가 국제적 갈등만 부추기고 이러는 것이 결국 자국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중수소 확산 시뮬레이션 결과 다 보셨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최춘식 위원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향력을 말씀드리는데.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한국원자력연구원하고 해양과학기술원이 각각 개발해서 고도화된 모델은 국제원자력기구의 방사능 모델 비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다수의 학술논문 게재 등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검증을 거친 정확하고 신뢰성이 확보된 모델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대로 그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춘식 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장관님이 주관하시는 해수부에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일본을 압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반듯한 특별한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만 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어떤 여론에만 의존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일본의 당위성을 자꾸 우리가 심어 주는 결과가 나올까 봐 그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장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철저한 모니터링을 진행함과 동시에 여기에 대한 압박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고 해외 사례를 더 면밀히 살펴보시기를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춘식 위원 그다음에 지역 현안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산 때 가평군 청평면의 중앙내수면연구소 부지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설계비 확보하고 용역비를 하려다가 실패한 게 있습니다. 지금 가평 같은 경우에는 북한강이라는 천혜의 여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해양 수상스포츠라든가 또 청소년연구소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참 대단히 교육하기에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지가 지금 그대로 방치

되어 있는 것은 다 알고 계시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최춘식 위원 이것을 어떻게 활용 가치를 가져 가려고 하고 있다면 어떤 것이 나올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재부에서 청소년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전국에 있다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이쪽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꼭 그쪽이 아니면 국립수상레저스포츠센터라든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지역하고 연결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평균청하고 해수부하고 같이 한번 서로 이것을 연구하고 상의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가평균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식 위원 그러면 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 어떤 것이 가장 적당한지 한번 마련해 보는 것 이것을 해수부에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알겠습니다.

○최춘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몇 년간 그렇게 방치가 되어 왔는데, 지역에서 지금 요구 사항입니다. 우선은 이것을 영구적이 아니더라도 임시로 개방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군 차원에서 찾으면 안 되겠습니까? 공원 형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용도와 목적이 정해져 있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지 않는 부분으로 가게 되면 다시 기재부 재산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염려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또 저수지도 있고 해 가지고 안전 문제라든지 재해 발생 가능성이 이런 부분들도 사실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평균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식 위원 이것까지도 가평균하고, 실질적인 어떤 관리에 대한 측면을 가평균에 전부 위임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규정을 우리가 마련할 수 있다면 가평균에 이것까지도 개방해서, 우선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현재 경관이 아주 좋은 데입니다, 여기가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공원 형태

로 활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활용하면서 다음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 방안을 찾는 것 이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것까지 한번 가평균하고 함께 협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가평균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협의해 보겠습니다.

○최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병훈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김제시부안군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장관님, 저는 시물레이션 결과가 사실 지금 시물레이션의 내용을 떠나서 이 시물레이션이 세팅되고 분석하는 이 틀이 우리 해양과학기술원에서 한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이원택 위원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여러 시물레이션을 했는데 사실 저는 시물레이션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 자료에 의하면 4~5년 후 정도에 삼중수소가 유입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물레이션의 신뢰성, 장관님 당연히 신뢰하겠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모델로서는 저는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데이터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남아 있다라는 말씀……

○이원택 위원 저도 그런 점은 상당히 저희가 이제, 4~5년 후에 유입되는 시물레이션은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문재인 정부 때도 시물레이션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고 그래서 너무 답답했는데 어쨌든 그 연장선상에서 성과가 나온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장관님 알다시피 이게 시료 채취가 아니라 데이터를 받아서 한 거잖아요. 삼중수소만 다 데이터를 받았는데, 1000개가 넘는 오염수 저장탱크 중에 4분의 1만 샘플링해서 일본이 진행을 했고 또 64개 방사능 핵종 중에 9개만 샘플링한 거고 그중에 우리는 삼중수소만 이렇게 봤던 거지요. 맞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그렇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리고 사실 삼중수소, 탄소-14, 스트론튬-90, 세슘, 플루토늄, 요오드 등 다핵종 제거설비(ALPS)를 사용해도 걸러지지 않는 게 있고 또 설령 걸러지더라도 방사성이 많은 핵종이 남아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이원택 위원 삼중수소는 신체에 축적될 뿐만 아니라 DNA 변형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생식기능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또 탄소 14는 생물에 쉽게 축적되는 방사성 물질이고 반감기가 한 5000년 이상 되는 거고 유전적 돌연변이를 일으킵니다. 스트론튬 90과 세슘은 오랜 기간 해저 토양물에 침전되고 어류, 해조류 등 해양생태계를 방사능에 노출시킬 수가 있지요.

또 우리가 분석 중에 수산물을 통해서 방사성이 2차 이전되는 부분에 대한 영향분석은 아직 안 돼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일본으로부터 받은 정보가, 일본이 국제사회에 제출한 정보가 제한되고 일본 통제하에 있고 또 IAEA에서 검증은 아직 진행되고 있는 걸로만 알고 있고.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IAEA를 신뢰할 수 있느냐 신뢰하지 못 하느냐 이런 문제는 있겠지만 적어도 이런 정보와 데이터 값을 구하기 위한 장관님 노력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 구두상으로 계속 요청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좀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 입장에서 당연히 불안하지요. 위기를 조장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땅 내에 저수지 파서 거기다 놔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윤석열 정부 내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도 국제재판소에 제소하는 걸 강력히 주장을 했는데 사실 그게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런던협약이라든가 유엔해양법협약을 보면 여기에 사전협의 의무, 사전통고 의무, 원자력 안전기준 준수 의무 또는 폐기물의 해양 투기로 인한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협약이거든요. 해양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협약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된 피해 근거라든가 규모라든가 내용이라든가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구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지금 일본이 제공 안 하고 있는데

추론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소를 하자는 것은 해양 투기를 방지 하자는 것이고 또는 사전협의 의무, 사전통고의 의무 또 원자력 안전 준수 의무를 제대로 지켰는지를 따져 보자는 겁니다. 따져 보자는 취지의 재판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두 달 앞둔 상황에서 이걸 실행을 할 수 있을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제재판소에 가자는 것은 그런 걸 좀 보완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일단 이걸 범정부 TF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범정부 TF를 통해서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외교부를 중심으로 해서 국제법적 대응에 있어서는 해양 배출의 위해성은 물론 일본이 그 의무들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게다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조금 정부의 역할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장관님, 제가 볼 때는 해수부는 어떤든 우리 바다와 환경을 지켜야 할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방사성 다핵종에 대한 철저한 검증, 자료 요청, 시료 채취까지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고 거기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다음에 아까 국제재판소의 재판 내용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 이걸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런던협약하고 국제 해양협약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리하게 요청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고.

또 아까 4~5년 후에 삼중수소가 도달한다 그걸 신뢰할 수 있다면 그것에 기반한 대책도, 삼중수소가 미약하다라고 보지 말고, 미약하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 없다라고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일본의 자료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다핵종들도 같이 오기 때문에 그 영향분석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이 맞다고 하면 거기의 전제하에 대응과 대비책을 철저히 세워야 된다 제가 그걸 좀 말씀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IAEA하고 지금 국제 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해 가지고 검증된 자료가 오면 그걸 가지고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또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가볍게 보지 않고 신중하게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장관님, 제가 그건 그렇게 마치고요.

장관님, 앞으로 글로벌 경제체제가 사실 신재생에너지 기반 경제체제, 탄소중립 기반 경제체제로 갈 것 같습니다. 25년·26년에 유럽이 속칭 탄소세, 미국도 붙이겠다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RE100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재생에너지를 대규모로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곳은 해상풍력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그렇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렇다면 제가 업무보고에도 봤는데 계획입지 또 어민과의 상생방안, 여러 가지 여기에 써 있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사실 속도를 내야 됩니다.

우리나라 경제체제가 불과 25년·26년이면, 2~3년 후면 탄소국경조정부담금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초기에는 가겠지만 가면서 더 세지겠지요, 더 확대되겠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품목이 확대되고 더 강화되겠지요. 그러면 우리나라 수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쟁력에 상당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해상풍력과 관련된 것을 해수부가 특별법 체제, 해수부가 주도적으로 확보하면서 속도를 내줘야, 재생에너지가 어디 생산돼야 그걸로 물품을 생산해 수출할 것 아닙니까? 재화를 생산해서 수출할 것 아닙니까? 재생에너지가 생산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재생에너지만 탄소세를 감면받을 수 있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산자위에서 수협까지 협의를 한 특별법안이 지금 법안소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어민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을 하고 그다음에 정부, 그러니까 정부 주도 계획입지를 통해서 설정된 구역에 풍력발전이 질서 있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법안을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제가 영국이나 네덜란드 가 봤을 때 해상풍력이 50%까지 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국내 전기의 50%까지 가고 있는데 그건 계획입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민들과 마찰이 제일 적은 지역을 발굴하고 거기에 발전 업체들이 들어오게 하고, 이거 중간에서 정부가 역할을 해 주고 그랬을 때 속도가 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속도를 좀 내야 됩니다. 속도를 내지 않으면 한국 경제체제가 아마 상당히 수출, 처음에는 적은 품목이겠지만 이 체제가 품목이 확대되고 더 광범위해질 것이기 때문에 해수부가 이 부분은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소병훈** 이원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서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삼석 위원** 인구 감소, 지역소멸 위기가 가장 높은 데가 섬 지역입니다.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서삼석 위원** 그리고 또 연안이 각종 사고로 인해서 위험지역으로 상존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청장님, 그렇지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서삼석 위원** 뭇 말인지도 모르고 ‘예’ 하면 안 되지.

장관님, 여객선 공영제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맞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서삼석 위원** 그런데 해수부 업무보고에는 한 줄도 없던데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업무보고 자체가 미래산업 위주로 이번에는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서삼석 위원** 금년 1월 VIP 업무보고 때 이것이 논의됐었나요, 안 됐었나요? 있었다, 없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여러 가지 산업에 들어가면서 한 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서삼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물을 게요. 있었다, 없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있었습니다.

○**서삼석 위원** 있었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서삼석 위원 내용까지는 안 묻겠습니다. 내가 알지만 안 묻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로드맵을 자료로 제출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알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그다음에 청장님 질문 잘 들으세요.

정보호 선박 전복 사고 이후에 우리 정부나 해경 또 선주, 선원들이 취해야 할 그런 행동들이 비상하게 부상되고 있어요. 우선 제일 시급한 게 5년마다 한 번씩 안전교육 하는 걸 좀 당겨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있는데 동의하세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서삼석 위원 그다음에 아리랑 3A호……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3호하고 5호입니다. 3A호 맞습니다.

○서삼석 위원 3호하고 5호?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그렇습니다.

○서삼석 위원 두 가지예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그렇습니다.

○서삼석 위원 이게 물체를 어디까지 식별할 수 있어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저희들이 위성 영상을 4~5일 정도 받아 가지고 해상에서 야간에 불빛 영상을 보고 조업어선 분포라든지 여러 가지 확인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삼석 위원 예를 들면 크기를 몇 cm까지 식별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몇 cm까지는, 정확도는 그렇게……

○서삼석 위원 제 자료에는 55cm까지래요. 인공위성이 55cm까지 식별할 수 있다면 선박 사고 시에 약간만 AI 기술을 잘 적용한다면 이런 사고를 줄일 수 있을 텐데 좀 아쉽다, 그런 것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세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서삼석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이번 사고 해역에 출동한 헬기가 사고 발생 후 37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대요. 그 숫자는 맞습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한 77km 정도 거리가 되는데 약 37분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서삼석 위원 그런데 출동하기 직전에 무슨 예열이라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가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항공기를 띄우려면 사전에 예열이라든지 워밍이 필요합니다. 특히

겨울철은……

○서삼석 위원 기종마다 다른가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기종마다 달리고 있습니다.

○서삼석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해경은 예열 시간이 한 25분 걸린 걸로 나와 있고, 기종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산림청은 어쨌든 15분으로 나와 있어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기술적으로 단축이 가능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지만 총체적으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만반의 대비태세를 좀 더 강화해야 된다. 단 1분이 아니라 단 1초가 아쉽잖아요, 사고 현장으로서는. 그런 걸 총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줘 보세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알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선원법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교육을 단축, 당겨서 할 수 있는 것도 곧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알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그리고 장관님, 우리 청장님도 잘 들으셔야 할 얘기 같은데 이번 정보호 사건 현장에 함선이 667척, 헬기가 27대가 동원이 됐대요. 맞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서삼석 위원 이것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에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전체적으로 누계입니다.

○서삼석 위원 조명탄만 873발을 사용했대요. 맞습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그 정도 됩니다.

○서삼석 위원 이걸 보안 사항일 수도 있으니가 돈으로 환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천문학적인 사건 수습 비용, 대응 비용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해수부는 고작 이런 용역을 하는데 단돈 10억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5년째 용역만 하고 있고, 그것도 일반 개발 용역으로 수협을 통해서 하고 있고.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어선안전조업법에 나와 있는 만큼 법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구명장비 개발 등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그런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를 해 주세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알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계산해 보세요, 조금만 더 투자를 했으면 이런 천문학적인 비용을 부담 안 하고도 될 텐데.

그다음에 장관님, ‘바다’를 거꾸로 한번 읽어 보세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다바.

○서삼석 위원 예, 맞습니다. 바다는 인간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여러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주권국가의 통치 행위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지 저는 그 이상, 이하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4년 후에나 우리 해역에 나타난다는 그런 시뮬레이션 결과들이 아까 회자되고 그러던데 지금 당장 후쿠시마 인근 바다에서 수입한 그런 생선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저를 포함한 모두가 다 한번 드셔 볼 용의가 있느냐고 제가 여쭙본다고 가정하면 장관은 먹을 수 있겠어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후쿠시마에서 들어오는 수산물은 수입이 안 되고 있으니까……

○서삼석 위원 가정을 했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아, 가정해서요?

○서삼석 위원 예.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안 먹겠습니다, 후쿠시마에서 오는 수산물은.

○서삼석 위원 그러면 이런 걸 못 하게 해야지. 장관이 뭘 죄예요.

해수부장관이 잘한 것도 있어. 섬 주민 택배비 관련된 거 지금까지 잘하고 있었으니까 앞으로 그거 끝까지 잘 살펴주세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알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모자반 수거 처리 비용도 하여튼 국비로 하기로 했으니까 계획을 잘 세워서 유사시에 이런 것들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서삼석 위원 고생하니까 장관 봐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상자 보급 사업 이거는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책이 너무 미흡해.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제가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내고 지금 독려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보시기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삼석 위원 미진한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교체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물량을 한꺼번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바로 그거예요. 이것도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보고해 주라니까 답변을 안 했어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서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1차 질의 마지막 순서로 윤미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향 위원 장관님, 모든 정치행위는 국익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국익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지 않으면 국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입각해서 장관님께서도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역시 후쿠시마 오염수 정부 대응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전반기 환노위 때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는 제기를 해 왔던 주제이기도 한데요, 그때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느끼고 있었던 것은 정부가 일본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입이 무겁다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국민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생명과 안전, 미래 세대의 권리까지 사실 안고 있는 문제가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건 바로 우리 해수부에서 주 업무를 하고 있는 어업민들, 수산인들에게도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다라는 그런 각오를 다시 한번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PPT 화면을 보시면요, 지난 7일에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잡은 농어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검출됐다는 뉴스입니다.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에 따르면 1kg당 85.5Bq이 검출되었어요. 이는 일본 정부 기준치인 1kg당 100Bq보다 낮지만 어업조합 자체 기준치인 50Bq보다 높아서 출하됐던 농어를 전량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농어 판매를 자체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 1월에도 후쿠시마산 우럭에서 기준치의 14배에 해당되는 1400Bq의 세슘이 검출됐다는 등의 뉴스도 있었고요. 이렇게 오염수 방류가 본격화되기 전부터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내놓은 각종 수치를 보면 문제없고 안전하다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그동안. 이러니 우리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다시 던지게 되고요.

지난 16일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발표한 삼중수소 확산 시뮬레이션 결과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한국방재학회 학술대회를 빌려서 조용히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이 시뮬레이션은 기초 데이터부터 문제가 좀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시뮬레이션은 일본 실시계획상 데이터를 기초로 연구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질의에서 일본 실시계획상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도쿄 전력 홈페이지에 있는 2021년 ALPS 처리수 처리에 관한 검토 현황 자료가 출처입니다.

이 화면에 나오는 삼중수소 목표 농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이번 시뮬레이션 기초 자료로 삼은 일본 실시계획상 데이터인데요. 즉 일본 측 자료를 그대로 가져다가 시뮬레이션을 해 놓은 겁니다. 지금 이게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을지,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일본 측 자료에 대해서는 미국 해양연구소협회에서 지난해 12월에 이렇게 입장을 냈어요. 혹시 알고 계시지요?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자료가 불충분하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표본 추출의 결함이 있는 경우도 있다’, 이거 확인하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정부 간 지역협력회의체인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전문가들도 지난 1월에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서 도쿄전력이 제공한 후쿠시마 오염수 저장 수조 내 방사성 핵종 관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국제 전문가들이 일본 측 데이터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국책연구기관에서는 그걸 토대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발표를 했다는 것, 이 민감한 시기에 말입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연구원들도 우리 정부에 추가 정보를 요구했더라고요. 지금 제시하는 자료입니다.

작년 7월에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방류 계획을 정식 인가할 때 연구진들은 다시 한번 기초 자료를 우리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구진들이 우리 정부 TF를 통해서 자료를 받았으나 내용은 기존 자료와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이번 시뮬레이션 결과 발표에도 연구진들은 방류가 예상되는 핵종 및 방출량 등 새롭게 검증된 정보가 확보되면 추가 시뮬레이션 시행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지난 10일 일본 도쿄전력이 바다로 방류하려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측정 또 평가 대상 핵종을 대폭 줄이는 계획을 세워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어요. 이것도 파악하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윤미향 위원 방사성 핵종 64개 중에 37개 핵종을 제외시키고 4개 핵종을 추가해서 결국 총 31개 핵종에 대해서만 농도를 측정하겠다는 것인데요. 그 후에 저희 의원실에서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핵종 한 가지를 더 줄인 것으로 확인을 했어요.

화면 보시는 것처럼 지난 14일 도쿄전력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처리수 취급에 관한 시행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 일부 개정 공지를 게시했습니다. 이 게시 내용은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결과예요. 이 문건을 보면 도쿄전력은 측정·평가 대상 방사성 핵종을 31개 중에서 2개 핵종을 제외시키고 1개 핵종을 추가해서 총 30개로 수정 신청해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이를 심사 중이었습니다.

장관님,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문제없고 안전하다 이 말을 신뢰할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답변하는 데서도 보면 그게 느껴져서 굉장히 답답했는데요. 이걸 어민들의 사활이 걸린 문제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그렇습니다.

○윤미향 위원 우리 국민들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도 해요.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정부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정부도 잘했다는 얘기는 결코 아

니예요. 일본 측에 요구할 것이 있으면 당당하게 요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해양 방류를 통해서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려는 문제가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 다른 것을 선택하라고 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다른 해결 방법이 있다는 것도 이미 해수부에서 파악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서 적극 대응하시길 바라고요. 국민 불안을 덮을 수 있는 방법 또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 그것이 국익이기 때문에 국익에 우선해서 그런 대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제가 이미 지난해에도 여러 국회의원들과 함께 성명을 발표하면서 오염수를 저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지적했어요. 우선 지상 저장의 방법이 있고요. 가장 싼 방법이 사실은 해양 방류지요. 또 대기 방출, 이것은 물론 온실가스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습니다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모르타르 고체화 방법도 있어요. 또 지하 매립 방법도 있습니다. 지층 주입 방법도 있습니다, 지층 매립하는 방법.

가장 싼 방법이 해양 방류예요. 그렇지요? 가장 싼 방법이 아닌 가장 안전하고 미래 세대에게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정말 평화를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라고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요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첫 번째 부분, 핵종 발견된 그런 부분들은 지금 그쪽 지역에서는 수입 금지를 해서 수산물 안전 부분을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일본 데이터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본이 제시한 데이터로밖에는 현재로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말씀은 여러 차례 드렸고.

또 일본 방류 계획이 안전하나 그다음에 방류에 대한 계획대로 할 의지가 있느냐, 안전하다는 전제하에서 방류 계획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국제사회하고 공동으로 해서 그 부분의 검증 절차를 밟아 가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PIF 전문가들의 안전성 지적 문제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챙겨 보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핵종 줄인 부분은 제가 보고받기로는 IAEA에서 그 부분은 평가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아마 제안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부분에 관해서 이 시뮬레이션을 가지고서 안전하다 이런 입장을 표시한 건 아니고요. 그거는 정말 시뮬레이션을 고도화를 해서, 지금 고도화해 가지고 모델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만들었고, 삼중수소라는 게 가장 많이 퍼지는 핵종이고 또 ALPS에서 걸리지 않는 핵종이고 양도 가장 많이 방출되는 핵종이기 때문에 그 핵종을 가지고서 우리 해역에 언제 도달하고 어느 정도 농도로 도달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해 봤다는 것이고요. IAEA, 국제사회에서 검증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서 핵종에 대해서 다시 또 시뮬레이션을 추후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신뢰와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미향 위원 그러니까 두 달 정도 남았어요. 방류까지 약 두 달 정도가 남은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난 국감 때도 계속 그랬지만 우리는 해양 방류 이후를 가정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에도 저는 해수부가 총동원해서 외교 활동이라도 벌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요. 무엇보다도 피해가 오냐 안 오냐를 떠나서 국민의 공포감이 조성되면요 이걸 정말로 큰 위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은 두 달 동안에도 탁상에서 일하지 마시고 정부가 총동원해서 이 문제를 할 수 있도록 해수부가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미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병훈 윤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한마디 드리자면 후쿠시마 오염수가 투기가 아닌 방류로 가려면 안전성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일본에서 거기에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 발표하는 안전성이라는 걸 믿을 수가 없다는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무조건 반대라기보다도 확인을 먼저 해야 되겠다, 확인하지 않고 투기하게 하면 정말 역사에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그런 점에서 접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정부에서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는 한 일방적인 해양 방류는 안 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위원장 소병훈 그렇습니다. 그걸 천명하셔야 되고 우선은 그걸 많은 태평양 연안 국가들과 그리고 많은 다른 나라들과 외교적으로도 서로 협조를 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잠시 중지했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회)

○위원장 소병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차 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 김승남 위원입니다.

장관님,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위원님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주셨고 또 장관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올 1월 4일 대통령이 참여한 업무보고 하셨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했습니다.

○김승남 위원 그런데 그 업무보고의 내용을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책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었어요. 장관님께서 보고를 안 하셨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이번 업무보고가 미래 산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다 보니까 해양쓰레기라든지 후쿠시마 오염수라든지 이런 주요한 현안들에 대해서는 보고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래 산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업무보고 하셨다 손치더라도 이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주 중요한 문제고 또 안전과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그렇습니다.

○김승남 위원 그런데 이것만큼 중요한 것들을

제껴 놓고 미래 산업만 갖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빠트렸다는 것은 국민적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이해가 안 돼요, 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다른……

○김승남 위원 일부러 이런 예민한 문제 정권 차원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이렇게 고려해서 그냥 뻔 것 아닌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승남 위원 아니, 장관님은 아니다 손치더라도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이런 것 보더라도 지금 현 정부가 하고 있는 것들이 국민의 안전, 먹거리 또 해양산업, 수산업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이것 보고 안 받겠다고 하더라도 장관님께서 나서서 보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해양산업 부분 해양 모빌리티 산업이나 수산업을 해양 블루푸드 산업으로 해 가지고서 기보고를 드렸고요.

○김승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 업무보고를 하는데 앞으로 1년의 해양정책에 관련된 것 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김승남 위원 그런데 이것을 뻔다는 것은, 방금 미래 산업과 관련된 것만 했다는 것은 이것 일부러 빼려고 그것만 한 것 아니냐 이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전체적인……

○김승남 위원 가장 중요한 거가, 중요한 문제인데……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전체적인 업무보고 주제 자체가……

○김승남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못했다고 시인해 주세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알겠습니다.

○김승남 위원 그리고 작년에 5월부터, 이 오염수 문제하고 관련해서 장관님께서 오늘 답변 내용의 거의 90%가 앞으로 범정부 TFT에서 논의를 하겠다, 의견을 교환하겠다 거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장관님께서 참여한 범정부 TFT, 여기 참석한 것 몇 번이나 되세요? 한 번밖에 없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차관이 참석……

○김승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그

러면 장관님이 참석하신 것은 한 번도 없었어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논의가 되는 사안들은 있었습시다라는……

○김승남 위원 도대체 이 범정부 TFT에서 뭘 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가 없어요, 이 중요한 오염수 문제를 갖고.

작년 국감 때 제가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국제해양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과 같은 잠정조치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 했습니까? 검토해 보셨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그것은 지금 외교부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계속……

○김승남 위원 그것 갖고도 부족하면 우리가 단호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조치 이것도 해야 된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지난번 국감 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 전혀 검토 안 해 보셨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수산물 수입은 계속 지금 유지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남 위원 아니, 8개 현과 관련해서만 금지 조치를 하지……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 전면 수입 금지조치 이것 지난번 국감 때 이야기를 했잖아요, 장관님.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가 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후쿠시마에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들어오는 선박에 있어서 평형수 문제,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2018년부터 작년까지 연평균 1220척 이상의 배가 들어오고 있고 이 가운데 평형수를 우리나라에서 배출하는 배가 126척이나 되는데 이것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남 위원 그런데 원전사고가 난 후쿠시마 현과 미야기현에서 출항해 공해상에서 평형수를 배출하지 않고 국내에 배출한 선박은 126척 중에서 몇 척인지 알고 계세요, 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120……

○김승남 위원 126척 중에서 우리나라 해안에서 평형수를 배출한 선박.

한 2분만 더 주세요, 2분.

○위원장 소병훈 그래요.

○김승남 위원 37척이에요. 그런데 이 37척 중에서 방류한 평형수만 해서 12만t인데 여기서 조사를 6척만 했어요. 저는 37척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달랑 6척 해 가지고 전체 국내 연안

의 방사능 농도가 평형수에서 나온 수치하고 비슷하다,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어느 기관에서 조사한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저희들이 조사한 겁니다.

○김승남 위원 해수부에서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김승남 위원 직접 조사했어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그러니까 검사는 전문기관에서 했고요. 전문기관에서 한 걸로 알고 있고, 위원님 지적하셨던 대로 연안 해수 방사능 농도하고 유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본조사하고 전수조사를 병행해 왔던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김승남 위원 평형수가 배출된 국내 기항지는 어디어디인지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그건 불필요하게 국민들한테 불안감을 야기시키고 또 지역 그걸 하기 때문에……

○김승남 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없다면 불안감을 야기시킬 게 뭐 있습니까? 어디어디에 평형수가 배출됐다, 어디어디 항에 배출돼 있다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고 민간인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지역 판매 수산물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서 지금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승남 위원 해경청장님,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해양 교육원 그것 왜 발표가 그렇게 늦는 거예요? 300일 이후에 하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저희들이 당초 용역 수행하는 데 한 1년 정도 걸리는데 기간이 좀 짧았습니다.

○김승남 위원 말이 안 되지요, 그건. 그러면 내년 총선 이후에 하겠다는 겁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승남 위원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세요, 그러면.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필요성하고 타당성에 대해서 보강이 되면 용역업체에다가, 저희들이 기관에다가 좀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독려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김승남 위원** 그거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보고 해 주세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승남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영 위원** 장관님, 지금 최근에 난방비 인상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난방비도 많이 올랐고 또 특히 기름값 또 전기료 올라서 모든 국민들, 특히 우리 어민이나 수산업 관계자들도 고통이 상당히 큰 상황이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안호영 위원** 지난 1월 기준으로 1년 전과 비교하면 농사용(을) 저압의 경우에 47%가 인상이 됐고 어업용 면세 등유도 20% 넘게 인상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기 사용이 많은 양식업계 또 마른김 가공업체 경영비 부담은 말할 것도 없고 신선도가 중요한 수산물에 꼭 필요한 보관시설과 제빙시설의 경비도 대폭 증가를 했는데 어민과 수산업계의 에너지 비용 경감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 강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지금 일단 전기요금 추가 조정 시에는 관계부처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 이번 인상분에 대해서는 3년을 나누어서 인상하도록 지금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전기요금이 에너지 가격에 지속적으로 연동될 수 있음을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양식업의 저에너지 구조 전환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너지 고효율 설비 보급을 위해서 정부 차원의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 관련해서 어민들, 수산업계한테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좀 협의하고 애로사항을 좀 들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안호영 위원** 주로 어떤 부분들을 수산업계에서 요구를 하던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먼저 면세유 부분에 관해서는 국회에서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말씀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전기료 급등으로 인해서 어렵다, 그다음에 사료값이 올라서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어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안호영 위원** 그 얘기를 듣고 구체적으로 한전이나 이런 쪽하고 협의를 좀 했습니까, 산자부하고?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산자부하고는 협의를 하고 장관한테도 별도로, 특히 농어업용 전기 부분에 관해서는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호영 위원** 그러면 실제로 그 얘기를 해서 방침으로 좀 확정된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지금 일단 3년 동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에 인상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3년 동안 나누어서 인상하는 그런 협의를 했고요. 추가 요금 조정이 있을 때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대통령께서도 지금 이런 요금 인상으로 인한 급격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올리는 속도를 좀 조절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산업통상부장관이나 이런 정부부처에서는 약간 톤이 좀 다르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실제로 우리 국민들의 이런 어려운 점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정부가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엇박자가 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적극적으로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안호영 위원** 지금 정부가 수산물 할인 행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과가 좀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안호영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화면에 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통계를 보면 지난해 관련 예산 610억 원 중에서 제반경비를 제외하고 548억 원이 실제 혜택으로 소비자한테 돌아갔는데 유통경로별로 행사 실적을 보면 대형마트가 43% 정도를 기록해서 압도적으로 높고 전통시장에서 진행되는 온누리상품권의 환급 행사는 9.3%

에 불과한 것이어서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거의 못 보고 대형 유통업체 중심으로 할인 혜택이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것 해결 방법이 없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초기에 할 때는 아무래도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포스시스템 이런 게 갖추어져 있지 않은 우리 전통시장들이 조금 불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제로페이 시스템이라든지 또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지금 계속 강화를 하고 시스템을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세적으로는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이 늘어나고 있고 또 최소 배달해 주는 기준을 자꾸 낮추어 가지고서, 지금 저희들이 2t에서 1t으로 낮추고 또 0.7t으로 낮추고 이렇게 낮추어 가지고서 전통시장을 통한 할인 혜택이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 많이 늘어나고, 추세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렇지만 실제 비율로 보면 아직도 좀 상당히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그렇습니다.

○안호영 위원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자면, 이걸 검토를 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전통시장의 경우에도 카드를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카드를 신용카드 회사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전통시장에서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혹시 할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그런 점도 한번, 연계방안도 검토를 좀 해 보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병훈 안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 장관님, 부산 북항 앞바다에 해상도시 플로팅 아일랜드 만들고 계신 것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추진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안병길 위원 유엔 해비타트에서 기후변화에 대응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와 맞물려서 그 이

전에 완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우디의 네옴시티에도 이걸 하려고 하고 있는 모양인데 단독 해상구조물들은 있어도 복합적으로 도시 하나가 플로팅으로 이렇게 해서 부유식으로 해서 만들어진 건 세계에 아직까지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 법령 하나하나부터 해서 지금 적용해야 될 법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게 아주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예를 들어서 우리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게 ‘관광숙박업에 필요한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숙박업 외의, 해상도시를 만들려면 도로도 필요하고 상하수도 시설도 있어야 되고 또 관광숙박업 외의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 용도지역 같은 경우에 이것을 보전녹지지역으로 볼 건지 자연환경보호지역으로 볼 건지 이런 용도지역 문제도 있고 바다 위이기 때문에 지반이라든지 또 대지면적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법적인 적용이 현재 현행법으로서는 굉장히 매우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 것을 빨리, 이게 2028년까지 완공을 한다는 목표인데 해수부에서 관련 법 검토를 좀 세밀하게 해서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또 구명조끼 문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2020년부터 해난사고 날 때마다 이 이야기를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난 4일 날 청보호 전복 사건 났었을 때도 이런 구명조끼 사업이 조금 더 빨리 됐더라면 인명 구조를 1명이라도 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면 매년 해상구조에서 구조를 못 하는 인원수가 좀 줄어들기는 줄어듭니다. 여기 지금 표를 보면 108명에서 66명으로 이렇게 줄어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것 가지고 만족할 게 아니라 구명조끼 이런 것을 조금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대략 그런 내용이 있지만 이런 기술 개발을 해야 된다 하는 단계는 이미 지났습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스마트 조난알리미 서비스 사업 이런 걸 이미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조금 더 확대해

보는 게 어떨까, 이미 기술 개발은 우리가 잘 돼 있습니다.

또 해수부에서 하고 있는 e-내비게이션 사업을 보면 LTE망이 거의 지금 100km 정도까지 다 가동이 되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해수부에서 신경을 쓰면 조난알리미 이런 사업이 구조자를 1명이라도 더 구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어선안전조업법이 2025년도 10월 달에 시행이 되는데 이게 보면 의무 착용 조건이 ‘기상특보 또는 소규모 승선 인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외에는 지금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가 안 돼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안병길 위원 이게 법령에 의해서, 하위규정에 의해서 착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해수부에서 앞으로 이거 해양수산부령을 만들 때 착용규정을 좀 더 엄격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한두 명 타서 조업하는 과정 속에서 물에 빠져서 조난당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소규모, 그러니까 2인 이상 탑승하시는 선박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했고 향후에 단계적으로……

작업하는 과정 속에서 구명조끼가, 지금 현재 구명조끼는 좀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명조끼도 기술 개발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구명조끼 보급사업 등을 같이 이렇게 병행해 가면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병훈 안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기구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청장님, 이게 인재개발원 설립 필요성의 최종 보고서입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중간용역보고서입니다.

○어기구 위원 중간용역보고서예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그렇습니다.

○어기구 위원 내가 지금 업무 과업지시서 다 읽어 봤어요. 저도 정부용역 PM 맡아 가지고 죽해 봤거든요. 많이 해 봤어요. 그런데 이게 중간

보고서입니까?

중간보고서, 과업지시서에 보면 공정률 70% 이상 진행했을 때 보고하라고 그랬어요. 공정률 70% 된 겁니까, 이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국회에서 거짓말하면 큰일납니다.

그리고 지금 과업지시서의 과업명하고 이것 다 르잖아요. 왜 뒷부분을 다 뺐어요?

그리고 담당 교육과장이 저한테 와서 보고한 게 뭐냐 하면 ‘입지평가지표 관련 각 지자체의 의견 수렴을 완료하였고 최종 후보 부지는 2023년 1월 중순에 결정 예정이다’ 이렇게 다 보고를 했어요. 다 용역이 끝났어요.

과업 보고서에 지금 지시한 내용의 10분의 1만 여기 들어가 있어요, 서론 부분만. 이렇게 지금 장난칠 겁니까?

지금 완전히 국회를 무슨 장난감으로 보는 거예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아니,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어기구 위원 여기 보세요. 이게 3000만 원짜리 용역이지요, 이것 부경대에서 했더라고. 그렇지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어기구 위원 3000만 원짜리, 내가 보니까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1억짜리예요, 1억짜리. 1억짜리 최종보고서를 이렇게 갖다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러면 이것 연구용역을 담당하는 사람은 징계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급하지 않아요, 지금? 이거 급하잖아요.

이게 청장님이 오고 나서 확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거 지금 언제까지, 업무지시서에 계약서가 다 있잖아요. 돈 다 지불했어요, 안 지불했어요?

이거 연구용역한 한국자치경제연구원의 명예에 관한 문제예요. 제가 이거 갖고 기자회견 합니다. 이렇게 장난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지금 이게 보니까 4개월 만에 한 거인데 본용역도 4개월 했는데 무슨 1년 동안 또 한다고 그래요, 추가 용역을. 한 달이면 되지, 길어야.

다 됐어요, 다. 지자체 PT 다 하고 평가 다 하고 사전평가…… 왜 그런 건 여기 하나도 안 들어 있습니까? 왜 다 해 놓고 여기 안 넣느냐는 말이에요. 지금 이게 최종본이에요?

제가 여기 한번 가 볼까요? 한번 여기 연구소가 볼까요? 대질신문 한번 해 볼까요, 지금? 내가 국감장이면 증인 불렀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언제까지 할 거예요, 이거 발표? 내가 볼 때는 지금…… 보고를 내가 받았는데 다 끝났다고 들었어요, 입지 선정이 다 끝났다.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위원님,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여기구 위원 언제 할 거냐만, 언제까지 할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구 위원 언제까지 할 거냐는 말이에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용역 수행기관에다 저희들이 속도감 있게……

○여기구 위원 언제까지 할 거냐고요? 한 달, 4월 달까지?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저희들이 협의해서 기간을 대략적으로 정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구 위원 한 달 시간 줄게요, 길게 한 달, 120일이니까 30일 주겠습니다.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사타에서 예타를 가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좀 사업을 탄탄하게……

○여기구 위원 나도 해 봤다니깐요. 자꾸 지금 나온 거 가지고 장난치려고 그래요. 이거 정권 게이트로 몰고 갑니다, 제가.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그래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충분히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구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내가 지금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은. 내가 지금 과업지시서 가지고 하나하나 다 따지면 1시간 걸려요, 1시간.

그다음에 해수부장관님, 지금 해수부에서 5억 원 들여 가지고 평택·당진항 종합개발 연구용역 하고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하고 있습니다.

○여기구 위원 이거 5월 1일 날 끝나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여기구 위원 이거 어떻게 검토 좀 해 보셨습니까, 장관님께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현재 추진되고 있는 평택·당진항 발전계획에 따라 가지고서 당진 지역 발전전략을 수립하도록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구 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이 용역이 시작됐는지 잘 아시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보고받았습니다.

○여기구 위원 이게 지금 평택하고 당진하고 너무 차이가 나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구 위원 이게 너무 홀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투자비라든지 재정 투자, 국가 재정 투자만 해도 네 배 차이입니다, 네 배 차이. 이거 맨날 평택한테 얻어터지고 살아야 돼요? 참나, 이거…… 그래서 당진항 독자 발전방안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용역을 한 겁니다, 장관님.

특히 지금 당진은 360만 평에 이르는 석문국가산단이 있어요. LG화학도 지금 공장을 짓고 있고 막 그런데 다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부두 문제예요, 잡화부두 문제. 이거 꼭 이 용역에 넣도록 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이 물동량……

○여기구 위원 반드시 반영돼야 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 여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병훈 여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한 문제는 원칙대로 하시면 됩니다, 원칙대로. 그리고 청장님이 보시는 소신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오해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그런 한 가지 일로 계속 가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이어서 이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達坤 위원 장관님, 제가 수산업하시는 분들하고 다른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소득 분석을 주 해 보니까 상당히 고심하셔서 성과가 좀 나고 있다 이런 제 나름의 평가를 드릴 수 있겠어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감사합니다.

○李達坤 위원 고생을 하신 것 같아요.

특히 어로 어가는 상당히 힘든 상황인 건 맞는데 양식 어가가 상당히 고소득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비용만 잘 통제를 하시면 상당히 정부에서 노력하는 것만큼 우리 수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조금 더 나가면 농업 분야에서 농협이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지원하는 거하고 수산업을 수협이라든지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을 좀 비교를 해 가지고…… 정부 지원이 저는 상대적으로 조금 불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 어가가 수가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목소리도 좀 작게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빨리 제가 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우리가 국감을 할 때, 저는 사실 18대에 있을 때보다도 지금 정부가 국회를 접촉하는 것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내가 18대에 근무를 해 봤는데 그게 아마 원거리에 있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감 할 때 질의해 가지고 장관님이 검토하겠다고 한 사안들이 굉장히 많아요, 위원님마다. 그것이 한번 어떻게 보고가 돼야 되는데 전혀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저 같으면 대표적으로 주변 지역하고 상생법안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빨리 결론을 내 주시면 제가 다르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시간 되는 대로 빨리 전달될 수 있는 것은 신항 주변에 매립, 주변에 배후지역이 부족하니까 매립도 하고 일부 지역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잘 안 되지요. 왜냐하면 다른 부처가, 여러 부처가 협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지금 신항 같으면 약 3700여 개의 컨테이너가 업무시설에 일시적으로 하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李達坤 위원 한 2년 동안 연장을 했는데도 정부 쪽에서는 연장을 계속하기 힘들다고 하니까 그것을 몰아내야 되는가 봐요. 그런데 그 물량이 지금 해수부에서 지정했던 영구하치장으로 오면 좋은데 안 오는 것 같아요, 하나도. 영구하치장은 텅텅 비어 있지요. 그걸 좀 빨리 파악해서 가지고 그쪽으로 옮길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줘야 되지 이 사람 그저 압력을 줘 가지고 밀어내면 그 물량이 전부 다 배후, 시내로 들어옵니다. 지금 시내엔 엉망이 돼 있습니다.

이 하치장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치를 밤에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의 생활을 거의 방

해하고 있어요. 아주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고 또 큰 컨테이너가 돌아다니면서 내는 교통의 위험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또 추가적으로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배후지역을 하다 보니까 걸리는 부처가 국토교통부하고는 도로 문제도 그린벨트 걸리지요, 그다음에 산자부하고는 지금 매립하는 거 걸려 있지요. 환경부 걸리지요. 국방부, 군사보호지역 걸리지요. 교육부, 학교 신설 걸리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부처가 관여되는 거예요.

이것을 전체 다 느끼는 사람은 저 혼자인 거예요. 국회의원이 느끼는 거예요, ‘아, 이 문제는 이 부처에 가 있지, 이 문제는 이 부처에 가 있지’.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생기면 나는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느 부처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만 건설이 앞으로 10여 년 더 계속되기 때문에 항만 건설과 관련된 거버넌스를 조금 상승,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총리실에 약간의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장관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내가 대통령실하고도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 때문에, 제가 오전 질의는 사정 때문에 못 왔기 때문에 하나 더 드리면 지금 경남도와 지방에서 워낙 민원이 많고 처리가 안 되니까 그러면 항만 건설 및 관리 관련된 기구를 한곳으로 조금 모아 보자. 지금 대부분 부산에 있으니까 실제로 활동은 진해 쪽에서 일어나는데 늘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 그 사람들이.

곧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항 이미 매립했는데 부지를 적절히 정해 가지고 종합, 예를 들어서 항만 관리 관련 부서의 타운을 만들든지 빌딩을 하나 건설하자 이런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셔서 이번 주에 그것도 여기 모여 가지고 전문가들끼리 토론을 한다는데 장관님께서도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항만 건설 거버넌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기본적인 해양항만 개발·운영·관리, 해양환경, 수산 이런 업무 대부분이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되어 있고 또 각 부

처 간에 어떤 이견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총리실에서 조정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보고를 드리고요.

별도로 총리실에서 조정 역할이 필요한 거버넌스 체계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達坤 위원 제가 상세하게 서면으로 질의를 할 텐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를 들면 항만 지역에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어 가지고 주민들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가 어떻게 되냐 하면 전국에서 학급당 학생 수가 제일 높은 지역이 되어 있어요. 이 문제를 풀려면 교육부가 나서야 되는데 교육부는 또 소홀합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항만은 건설해 가지고 관리는 전부다 경제자유구역청에 넘겨주는데 그때 넘어왔을 때는 사실은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건설할 때 생겼던 문제들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낼 테니까 정부 안에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이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야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회의를 잠시 중지했다가 오후 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병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용 위원 정희용입니다.

장관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잘 알다시피 기후변화,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결국은 여기서 탄소 배출 대응을 잘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정희용 위원 작년에 송명달 실장님하고 같이 갔다 왔었는데, 이집트에서 기후변화 당사국총회 때 미국하고 녹색해운항로 협약 체결했지 않습니

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정희용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올 1월부터 10월까지 한미 공동으로 사전타당성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 결과에 따라 가지고서 세부 로드맵을 마련해서 녹색해운항로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요.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마는 메탄올 선 건조가 HMM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루어지면 그 선박들을 이용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희용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세 번째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LA하고 상하이 그다음 싱가포르하고 로테르담 그다음에 우리 부산하고 시애틀, 그래서 세계 세 번째인데 우리가 이게 잘 성사가 되고 나면 해운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국가로서의 이미지 제고, 신인도 향상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그렇습니다.

○정희용 위원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정희용 위원 그래서 연결해서 국제해사기구하고 EU에서 해운업 탄소 감축에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해사기구에서는 탄소부담금 이런 경제적 규제를 추진할 예정이고 EU에서도 독자적으로 부담금 제도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게 경제적 규제가 되면, 안 그래도 원가 부담이 지금 커지고 있는데 이 경제 부담까지 지게 되면 우리 해운선사들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해수부가 선도적으로 이 변화를 주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정희용 위원 그리고 장관님, 제가 칼럼 쓰신 것 봤습니다, 1월 달에 한국경제에 ‘해양모빌리티 산업 선도국가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님께 업무보고에도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들어가 있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래서 쓰신 것처럼 현재 290조 규모의 해양모빌리티 산업이 2030년에는 741조까지 대폭 확대될 가능성을 전망하고 계신다. 그래서 미래 먹거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모빌리티 산업에 대해서 좀 강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해운 분야에 적용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민간에만 맡겨 두기에는 저는 좀 어렵다, 곤란하다, 해수부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수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지금 일단 모빌리티 산업 중에 제일 큰 부분이 자율운항선박하고 친환경선박 그다음에 디지털 해양교통 플랫폼 구축으로 크게 분류가 되고요.

자율운항선박 기술 확보를 위해서 산업부하고 공동으로 해서 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 확보를 20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울산에 실증센터를 구축해서 규제샌드박스, 규제 특례라든지 정책 지원을 담은 법률 제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개발과 관련해서는 지금 자율항해 알고리즘, 기관 자동화, 사이버 보안 등 기술 개발을 완료해서 시험선에 탑재해서 실증운항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한중일 항로를 운항하는 컨테이너선에다가 직접적으로 이 설비를 넣어 가지고서, 자율운항시스템을 탑재해서 실증을 해 볼 생각이구요. 30년까지는 완전자율운항 기술 개발까지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장관님, 자율운항선박 기술을 강조하셨는데 외국 사례들은 해수부에서 다 면밀하게 분석하고 계시겠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희용 위원 저도 장관님 칼럼의 맨 마지막 줄이 제일 가슴에 와닿는데 ‘증기기관의 등장은 산업혁명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인류에게 가져다 주었다. 증기선으로 인류가 최초로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에 도착한 것과 같이 새로운 친환경·디지털 선박은 인류를 또 다른 세계로 인도할 것이다’, 공감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이 위기의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해수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1분.

○정희용 위원 그리고 제가 요즘 말씀을 조금

많이 듣는데 TAC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시대가 변했는데 이거 어업인들 생각해서 조금 전향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지금 가능한 모든 규제들을 사실 TAC로 합쳐 나가려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어구·어법 규제라든지 톤수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TAC로 가면서 자율적으로 어민들이 TAC에 참여하고 할 경우에는 정말 획기적으로 규제를 풀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어민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희용 위원 지금 어업인들의 경영환경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하여간 TAC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들을 개선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그리고 직불제 같은 경우에도 TAC 직불제, 그러니까 수산자원보호직불제도 계속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구요 또 경영자금 지원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 조승환 장관님, 오전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관련된 질의들이 꽤 있었는데 나는 정부의 입장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탠스는 실제 오염수의 위해성과 관련된 정보 이거를 사전에 충분히 공개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검증한 이후에 거기에 따른 대책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강구한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입장이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윤준병 위원 그런데 일본 정부에서 관련된 정보가 제대로 공개가 안 되는데 우리는 일본 정부에서 제한적으로 주는 정보를 가지고 마치 그게 전부인 양 일본 정부가 다 준 정보인 것처럼 인식하고 그걸 가지고 국민들에게 위해성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근본적으로 자세가 잘못됐다고 저는 봐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그 제한된 정보라는 거는 저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요, 국민들에게.

○윤준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한된 정보이면

그걸 가지고 제한된 내용을 분석해 놓고 그게 마치 정상적인 정보인 것처럼 우리가 발표하고 연구하고 이 모양새는 아주 안 좋은 자세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번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하고 연구 결과 발표한 것, 말로는 이게 확산 시뮬레이션, 업그레이드된 최초의 내용이라고 이렇게 발표하는데 무슨 수단적인 내용을 가지고 왜 본질적인 내용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오인되게끔 만들어서 발표를 합니까?

그게 내용조차도 64개의 핵종, 64개 핵종만이 위험한지 여부도 검증이 안 돼 있고 그중에 ALPS를 통해 가지고 9개만 걸러지는지 여부도, 어차피 일본 정부가 주는 정보 자체가 불확실한데 그걸 가지고 검증된 것처럼 얘기하고 저는 이런 지금 우리 정부에서 대응한 자세 이거 잘못됐다고 보고요.

또 일단 이런 제한된 정보 때문에 우리가 한 발을 못 나가기 때문에 그런 제한된 정보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우리가 계속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해양법협약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긴급 조치와 관련된 사전 방제 조치를 하라는 거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윤준병 위원 그러면 정보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제소를 해라 그리고 긴급 조치를 해라, 그 일환으로 그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올 때까지는 방류를 못 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라도 간접적으로 막겠다는 건데 왜 그런 조치를 적극적으로 안 합니까? 해야지. 우리가 손해 볼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그게?

아까 모 위원님 말씀하시던데, 그렇게 하면 결과가 우리에게 유해하지 않다고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던데 이 내용은 그런 취지의 내용이 아니에요. 본질적인 내용이 지금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으니 원하는 정보가 공개될 때까지 오염수 방류는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조치를 요구하는 건데, 우리가 원하는 정보 다 공개하고 있나요? 최소한도 그거는 막아야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여기에 나름대로 얘기가 있겠지요. 저는 대표적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하고 원자력연구원에서 시뮬레이션 발표한 것, 여기에 더해서 해수부에서 ‘이게 과학적·객관적으로 신뢰할 만한 시

뮬레이션 모델을 개발한 것에 의미가 있다’ 이따위 발표나 하고 이런 내용은 아주 잘못됐다, 앞으로 그런 내용 좀 제대로 관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해경청장님, 오전에 해양경찰 인재개발원 관련돼서……

1분만 더 주세요.

관련해서 자료 요구가 있었고 자료제출을 하셨는데, 원래 용역은 과업지시서대로 하는 거지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원칙입니다.

○윤준병 위원 그런데 과업지시서대로 용역 결과가 안 나오면 어떻게 조치해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저희들이 보완 요구를 하고……

○윤준병 위원 보완 요구를 언제쯤 합니까?

세 번, 용역 보고는 착수보고·중간보고·최종보고 이렇게 3단계로 하지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그렇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동안에 용역 보고 뭐 받았어요?

아니, 여기 과업지시서에는 후보지별 현황조사, 여건 분석 해서, 최소한도 3개를 가지고 분석해 가지고 결과 도출하라고 돼 있는데 과업 결과 최종보고서가 그렇게 짜여 있습니까? 그 내용은 하나도 없는데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중간보고서에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보완을……

○윤준병 위원 아니, 중간보고서에서 그런 내용이 없으면 타절을 시키든지 하셔야지 그거를, 이것도 12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으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 책임져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용역 관련된 사람들?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좀 전에 어기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준병 위원 여러 가지 지적은 내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행정을 할 때 기본이 과업지시서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과업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착수보고 할 때 착수보고 지시하면서 받고, 중간보고 할 때 제대로 되는지 점검하고, 최종보고서는 중간보고 한 내용이 제대로 담보돼서 납품되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뭐 했어요, 그동안?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

○윤준병 위원 그걸 가지고 제대로 안 하니까 이런 오해, 오해인지 실제 장난치고…… 지금 속설에 떠도는 얘기가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위원장 소병훈 윤준병 위원님, 질의 마무리해 주십시오.

○윤준병 위원 이것 국감 할 때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다 받아 볼 건데 있으면 빨리 자료를 제출해서 제대로 답변을 하세요, 숨기지 마시고.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윤준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식 위원 최춘식 위원입니다.

해양청장님께 좀 질의드릴게요.

지난 회기 때 우리가 마약류 단속을 위해 가지고 탐지견이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이 대두됐던 건 알고 계시지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보고받았습니다.

○최춘식 위원 그런데 지난해 예산에 이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청장님 생각에 현재 우리가 마약 단속하는 현장이 어디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루어지는 장소가?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저희들 해양경찰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주요 항포구나 항만 또 선박 입출항이 용이한 연안이나 해안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춘식 위원 그리고 또 다양한 장소에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탐지견 없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탐지견 필요하십니까, 필요치 않습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탐지견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세청과 이번에…… 관세청에 113두의 마약견이 있습니다. 그 마약견이 인천에 있는 훈련센터에 집중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각 주요 항만의 지방 관세청에 있습니다. 선박이나 첩보나 정보 입수시에 활동을 할 때 CIQ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선에 대해서는 달리하겠지만. 그래서 어느 기관이든 정보든 첩보 입수하면 마약견에 대해서 협조를 하겠다, 관세청 이외에도 관세청장과 해양경찰청장 간의 MOU를 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춘식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그 필요성을 제기했을 때 해경에서 어떤 얘기했느냐 하면 마약견센터 설립을 요구했었어요, 인원도 확충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마약탐지견이 없는 상태에서 임무 수행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이것 설립하는 자체가 너무나 큰 예산이 들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사실은 난색을 표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MOU 체결을 말씀하셨는데 관세청하고 해경하고 그러한 어떤 업무 협조를 통해 가지고 센터를 설립하지 않고도 마약견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일부는 협의를 했고. 아까 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기관에서…… 기존의 관세청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경찰이 들어갔을 때에 여러 가지 역효과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약견 공동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 전체로 볼 때는 어느 것이 효율적이고 또 서로 상호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거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여튼 바람직한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업무에 대한 난이도를 해소하는 방법 중의 하나인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최춘식 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적게 들이고 그런 업무 협조를 통해 가지고 서로가 양쪽 기관에서 같이할 수 있는 부분들 이것을 찾아가는 것이 원활한 업무 수행의 관점이라고 보고 있는데.

청장님, 이거는 저희가 원하는 것은 관세청하고 해경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에 있어 가지고 합의를 하셔서 필요한 부분을 서로 공유하는 형태로 해 가지고 마약탐지견을 보유하는 그런 쪽으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가려고 서로 업무협약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춘식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방안이 나오는 대로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십시오.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춘식 위원 그리고 장관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일이 어떤 날인지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최춘식 위원 독도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일본에서 얘기하는 다케시마……

○최춘식 위원 그렇습니다. 내일이 그런 날입니다.

지금 일본은 독도에 대해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끈을 계속 놓지 않고 끝까지 하여튼 소위 저거한 말로 물고 늘어지고 있는데, 이 다케시마의 날까지 정해 가지고 독도를 자기네 영유권이다 하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일이 그런 날인데 여기에는 일본의 차관급이 꼭 참석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저희도 지금 독도의 날이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최춘식 위원 10월 25일인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그렇습니다.

○최춘식 위원 이때 저희는 어떤 규모로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지자체 행사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춘식 위원 지자체 행사로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최춘식 위원 일본하고 규모가 좀 다른데, 그 중요성을 우리가 대두하는 측면에서 우리도 원활한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세계인들이 동북아시아의 대한민국이라는 크지 않은 나라 옆에 있는 그 독도라고 하는 작은 섬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 가지고는 거기에 합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독도에 대한 애착을 좀 더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에도 보면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보전·관리를 위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 여러 가지 법률도 우리가 제정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거 2005년도에 제정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장래의 독도를 놓고 본다면 여기에 대한 우리의 역할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가 명시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많이 달라져 가지고 작년에는 28만 명이 여기에 방문을 했

습니다. 여기에 독도안전센터라고 하는 것을 옛날부터 추진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됐었어요, 2014년도부터 이걸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9년 만에 처음으로 독도안전지원센터 실시설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용역비를 책정했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최춘식 위원 1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실상부한 독도에 대한 그런 애착을 갖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다른 데가 아닌 우리 해수부에서 애착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독도가 명백히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자체적으로 구상하고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독도입도지원센터라고 그래 가지고 08년부터 추진이 되다가 14년 이후에 환경 문제, 안전 문제, 경관 문제로 해서 관계 부처 간의 의견 조율이 안 돼서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사업을 독도입도지원센터로 바꾸어 가지고서,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독도 방문객들의 안전 그다음에 거기에 우리 등대 직원들이 있고 우리 경찰 병력들이 가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전을 위한 필수시설로서 과거의 환경이나 경관 문제로서 그 우려를 해소하는 설계를 하고 국조실하고 외교부·문화재청, 관계 부처하고 협의하고 관계 전문가들 검토를 거쳐 가지고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춘식 위원 그 위험성, 즉 안전 말씀하셨는데 독도에 들어갔다 고립되면 거기서 피신할 데도 별로 없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그렇습니다.

○최춘식 위원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하기 위한 어떤 시설도 될 수 있다는데, 상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상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병훈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이원택 위원 해수부의 어떤 비전 중에 신해양 산업을 끌고 가는 거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중에 아까 해양에너지 해상풍력 관련된 거 좀 더 속도를 내 줬으면 좋겠다. 이걸 아무튼 결단이 필요한 시기가 임박해 와 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꼭 드립니다.

해양바이오산업 그다음에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하는 거,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하는 거 법도 만들고 마스터 플랜도 구축하겠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그렇습니다.

○이원택 위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게 우리나라가 좀 늦었다 이렇게 봅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법과 마스터 플랜을 좀 잘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이원택 위원 그다음에 동해, 서해, 남해를 포함해서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삼면이 바다이고 그만큼 뛰어난 관광자원을 갖고 있고 또 비행기로 한 6시간 거리에 많은 인구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걸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해양바이오나 해양모빌리티 이걸 말씀 안 드려도 좋은데 이게 구상으로만 가지 말고 실제 액션 플랜들을 좀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기 액션 플랜을 제가 보고 있는데 좀 더 진척된 플랜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구체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예, 구체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국가해양정원, 이거 하위법령 정비하고 종합계획 수립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도 저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진척 상황 저도 계속해서 모니터도 하고 응원도 할 테니까 좀 적극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해수부가 가야 할 비전 중의 하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장관님 이제 내수면, 그러니까 농지에서 가축을 집단적으로 기르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농지에서 내수면 양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이원택 위원 가축을 기르는 데 농지 전용이 필요 없고요. 또 기간은 무제한입니다. 그런데 내수면 어업을 하면 농지 전용을 해야 되고요, 30%를. 그다음에 최장 12년입니다. 이걸 좀 약간…… 농지에서 가축이나 물고기를 기르느냐의 차이인데 이 부분은 저도 입법까지 검토할 테니까 조금, 내수면 어업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입니다. 상당히 인허가 절차상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알겠습니다. 농식품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좀 적극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귀어인들이나 청년 귀어인들한테 배를 임대해 주는 것도 있지만 양식장을 임대해 주는 게 법적 근거가 마련됐는데 24년부터 10개소 준비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것 좀 가급적 추경이든, 추경이 세워진다면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셔서 그런 시범모델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이원택 위원 장관님, 블루푸드 산업을 키우겠다 또 수출을 일구어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농업도 그렇고 수산업도 수출 활로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해 왔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지금 새만금신항이 준비되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농산물 수출전용항 이런 개념으로 해서 지금, 올해 농식품부의 예산 중에 글로벌푸드허브 조성이라고 하는 예산이 서 있습니다. 신항과 연계해서 서 있기 때문에 여기에 블루푸드 산업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신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지금 새만금에 스마트수산가공융합단지가 건립되고 있는 만큼 집적 필요성에 대해서 종합단지가 조성되는 과정 속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잘 실행할 수 있도록 액션 플랜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새만금신항에 방파제하고 진입도로 올해 발주 들어가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이원택 위원 차질 없이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 구성이 돼야 그런 비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위관장 현대화사업, 보니까 27년까지 한 80% 끝내겠다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건 잘 결단하신 것 같습니다. 어상자도 덧붙여서 저도 국감 때 말씀드려 왔는데 사실 위관장이 소비자가 볼 수 있는 첫 번째 수산물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맞습니다.

○이원택 위원 거기를 정말 현대화하는 게 우리 수산물에 대한 어떤 신뢰도라든가 품질 제고라든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상자를 포함해서요 그거 좀 잘 결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이원택 위원 그다음에 해경청장님!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이원택 위원 작년 국정감사 때 저도 마약범죄 관련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 조직 개편도 됐고 일부 좀 증원이 됐더라고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그렇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런데 국제적인 협력하기 위한 담당 과도 아직은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그렇습니다.

○이원택 위원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여러 가지 지금 각 지방청의 마약수사대가 신설이 되고 이렇게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협력마약과, 과 정도는 신설이 지금 현재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서의 외 사계 인력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 180여 명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마약사범 단속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본청 단위와 과 단위 정도는 신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직이라든지 행안부에 필요하면 설득을 해서, 설명을 해서……

○이원택 위원 그거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내에서 마약 단속이 중요하지만 들어오는 것 자체를 차단해서 막아내는 게 저는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국제 협력이라든지 정보라든지 할 수 있도록……

○이원택 위원 그 대책을 좀 적극적으로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이원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삼석 위원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 수사국장님하고 수산정책관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위원장 소병훈 먼저 그러면 두 분이 발언대로 나오시거나 마이크 혹시 있습니까, 무선마이크? 이쪽으로 잠깐 나오시지요, 발언대로.

○해양수산부수산정책관 최용석 수산정책관 최용석입니다.

○서삼석 위원 수사국장 어디 갔어요?

○위원장 소병훈 수사국장님 마이크 있으면 마이크 가지고……

○서삼석 위원 그러니까 수사국장하고 수산정책관한테 질의를 하겠다 이거예요.

나오신 분 먼저 얘기할게요.

○해양수산부수산정책관 최용석 예.

○서삼석 위원 하루 종일 장관한테만 물으니깐 안 되겠습니다. 피곤하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감사합니다.

○서삼석 위원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우리 여야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한목소리를 내시는 게 결국은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국내의 소비자들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는 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 연장선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있는데 이거 관련 된 국 맞나요?

○해양수산부수산정책관 최용석 낚시 관리 육성법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

○서삼석 위원 그럼 누가 해요?

○해양수산부어업자원정책관 최현호 어업자원정책관입니다.

○서삼석 위원 들어가세요. 수산정책관, 미안합니다.

낙시 관리 육성법이 있지요?

○해양수산부어업자원정책관 최현호 예.

○서삼석 위원 실태를 조사한 것 보니까 너무 좀 수준이 낮아요. 그런 와중에 시중에서 유통되는 낙시 도구들이 거기서 생성되는 납으로 인해서 가지고 소비자원에서 지적을 받은 바 있어요. 그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어업자원정책관 최현호 예, 알고 있습니다.

○서삼석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양수산부어업자원정책관 최현호 그동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낙시 도구에 대한 그런 조사 부분들이 관리 부분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서삼석 위원 하여튼 철저히 하시고 선의의 피해를 보는 낙시 도구를 판매하거나 지급한 사람들에겐 피해가 안 가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전수조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부어업자원정책관 최현호 예.

○서삼석 위원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세요.

○해양수산부어업자원정책관 최현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수사국장님!

○해양경찰청수사국장 김성종 예.

○서삼석 위원 여러분들이 답변할 기회가 없으니까 여야 위원님들이 얼굴도 몰라.

5년 동안 통계를 보니까 해양범죄 발생 건수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24만 7879건이라고 자료가 되어 있어요. 맞나요?

○해양경찰청수사국장 김성종 예, 맞습니다.

○서삼석 위원 범죄유형은 세세히 모르겠습니다. 마는 해양범죄는 2017년 2만 6000건에서 2022년 4만 7000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81%가 늘었다는데 그것도 맞나요?

○해양경찰청수사국장 김성종 예, 맞습니다.

○서삼석 위원 그런데 관련 범죄자 검거 인원수는 30%가 감소했어요, 2017년에 7236건에서 2022년에 5583건으로. 이것도 맞나요?

○해양경찰청수사국장 김성종 예, 맞습니다.

○서삼석 위원 어떻게 해야 돼요, 주무 국장으로서?

○해양경찰청수사국장 김성종 발생에 대한 검거율은 90% 이상으로 똑같은데, 다만 범죄의 성격

상 한 사람이 저지른 범죄 그 숫자 차이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서삼석 위원 어쨌든 저를 비롯한 우리 여야 위원님들이 해경 수사 관련해서 예산도 확보 좀 해 주고 첨단장비도 구입할 수 있게끔 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영향을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아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하기도 하지만 내가 주무 국장을 발언대로 오시라고 한 것은 좀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나오시라고 한 겁니다. 별주려고 나오라고 한 거 아니에요.

○해양경찰청수사국장 김성종 예.

○서삼석 위원 그래서 지금 앉아 계시는 청장님이나 해수부장관님께서도 이런 일선의 수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불편함, 부당함, 애로사항들을 좀 잘 새기셔서 가지고 기재부나 정부 관련 부처에 좀 강력히 어필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 해소를 시켜 주세요. 청장님, 그렇게 하세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것 이것도 결과를 보고하세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사건수사비 증액이라든지 여태 가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낙시 관련 초과하는 납 문제 얘기했는데 아까도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지만 선의의 관련자들에게 반드시 피해가 가면 안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알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그리고 엄연히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그런 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라서 철저히 좀 하세요. 너무 실적이 저조해 가지고 기록에 남기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해수부장관, 청장은 다른 기관장보다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그렇더라도 제가 방금 수사국장한테 물어본 내용들은 반드시 차제에 문제들이 시급히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서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미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향 위원 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윤미향 위원 선원 수급 부족 문제 조금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선원 수급 부족 문제로 우리나라 해운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지금 팽배합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지난 국감 때도 그렇고 제가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어서 사실은 씨스포빌·정도산업 부당하고 노동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국감 이후에 아직 처리가 되지 않아서 제가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당하고 문제 또 선원 고용안정의 중요성 굉장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MZ세대 해기사들의 승선 기피 현상과 원인 이것을 살펴보면 선원들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건 이걸 만드는 게 필요하다 또 지속가능한 선원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계속 주문을 했습니다. 잘 진행이 되고 계신가요?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개선 속도가 더딘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좀 더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향 위원 속도 내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난 8월에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20대 선원이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바다 위 배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사실은 업무상 재해, 즉 산재로 인정을 받은 것이지요.

저는 이번에 그 판시 내용도 내용이지만 유족이 하신 말씀 ‘산재 인정에 대해서는 기쁘지만 애초에 근무환경이 열악하지 않았더라면 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씀이 사실은 농해수위원으로서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장관님께서도 무겁게 받아 안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의원실로도 선원 근무환경에 대한 문제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여객선 승무원의 인권과 노동권 침해 사례 제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력, 폭언, 음주, 소란 또 성희롱, 성추행 등 피해 사례가 굉장히 심각해 보였어요. 이런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듣고 계신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향 위원 챙겨 봐 주시고요.

본 위원이 해운법 개정안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장관님도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에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선원 안전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보호 사고가 참 안타까운데요.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면은 어선 사고 관련 수협중앙회 자료예요.

지난해부터 올해 2월 12일까지 접수된 어선 사고가 850건입니다. 인명 피해도 굉장히 커요. 특히 청보호 사고와 같은 선박 전복은 그 피해가 굉장히 큼니다. 이미 그 심각성은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왜 달라지지 않고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동시에 던지고 싶습니다.

해경 보고에 따르면 청보호 사고 최초 신고가 별도의 조난신고 장비가 아닌 휴대전화였다고 하대요. 청보호에는 무선 설비를 포함해서 해양수산부의 제1차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 계획에 따라서 보급 중인 바다내비 단말기도 설치되어 있었어요. 확인하셨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윤미향 위원 이 바다내비에 구조신호 발신 기능이 표시장치 및 송수신기의 SOS 버튼을 눌러야 작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윤미향 위원 그런데 전복 사고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기관 고장이나 침몰 등에 비해서 배가 빠르게 가라앉잖아요. 순식간에 가라앉아서 작동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선박 기울기나 또 침수 등 일정 조건 이상의 문제가 발생할 때 자동으로 조난 신호가 송출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비전문가인 제 눈에도 그게 보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안전교육 강화가 지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면과 같이 어선안전조업법 제25조에 따라서 연간 1회, 4시간 안전조업교육을 이수하고 있는데 수협에서 위촉한 전문 강사 15명이 전국을 돌면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력 등을 충원해서…… 7만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15명이 전국을 돌면서 1회, 4시간 안전조업 교육으로 안전 조치가 되겠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이 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계획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대상 인원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겠더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윤미향 위원 그리고 바다내비 교육에 대한 제안도 조금 부탁드립니다 싶은데요. 안전조업교육 과목에 통신장비 운용도 있지만 짧은 교육 시간 상 바다내비에 대한 부분은 장비 소개 정도로 끝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형식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현재 제조사에서 진행하는 단말기 설치 시 현장 설명회를 통한 교육 외에도 바다내비에 대한 교육을 늘려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요. 그것도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고령화되는 어선원, 그 연령 변화에 따라서 맞춤형 교육도 필요하다, 조금 더 자세하고 친절하게. 꼭 현장에 필요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MZ 세대에 맞추어서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 강의 이런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정보 콘텐츠 제공도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도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정보호는 해수부가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 사업의 하나로 추진한 표준 어선형에 맞춰서 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복 사고가 있었고 대형 사고가, 인명 피해가 발생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어선원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령화로 인해서 인터넷 강의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측면들도 있고. 그래서 어선원 교육에 대해서는 한번 전반적으로, 어선원 교육체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윤미향 위원 그리고 이번 사고 때 보면 이미 출발 직전에 배가 기울었고 뭐가 이상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출항하지 않도록 하는 지침이라든가 가이드라인 같은 거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철저하게 감독되고 그랬다면 어선 전복 사고가 일어

나지 않았겠지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어선원의 어떤 특수성, 선박이 갖고 있는 특수성 그다음에 조업에 대한 특수성 이런 부분들과 어떤 정부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부분들에서 형평이나 잘 조화롭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윤미향 위원 그 조화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중점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그렇습니다.

○윤미향 위원 그럴 때는 전라도 출항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 그렇지요? 그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교육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체계에 대해서는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윤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2차 질의 마지막 순서로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현 위원 장관님 이하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청장님도 고생이 많으시고요.

제가 어제에도 농림부장관을 상대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해수부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현재 우리 어민들이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기름값, 전기요금 등 에너지 요금 인상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어업용 면세유는 200ℓ 기준 12만원 하다가 35만 원까지 치솟았고 현재 25만 원대로 떨어졌는데 어민들이 실무담하는 액수는 작년에 비해서 3배 이상 올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민 연료인 등유도 1497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한 40% 가까이, 36% 올랐거든요.

전체 출어경비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50% 가까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더 이상 어업을 못 해 먹겠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수산물 건조나 냉동 보관을 위한 전기요금도 폭등해서 어려운 형편입니다.

다른 주요 현안도 많이 있겠지만 어촌의 어민들의 가장 근본적인 어업에 기본 이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건데, 폭등하는 건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저는 정부에서 추경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추정 편성해서 고통이 심한 어민들을 지원하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어민들이 기름값 인상, 전기료 인상 그다음 양식어가들은 사료값 인상 이런 거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건 저희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고, 방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지금 하고 있고 일차적으로 이번 인상분에 관해서는 3개년에 나누어서 하기로 했고 어떤 형태로든 어민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 부분이 하여튼 해수부의 주된 가장 큰 관심사가 돼야 된다고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여수항이 올해 문을 연 지 100년이 됩니다. 개항 100주년이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해수부에서 용역비를 세워서 2021년에 여수항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1년여 진행된 연구용역 과정에서 우리 시민 대표들도 함께해서 여수의 미래 100년을 향해 갈 해양관광복합항만으로 육성하자 이런 미래 비전도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여수항·광양항의 항만별 특성화 및 기능 개선 방안을 강구해라, 여수시 구항과 도심에 연결할 수소트램을 구축하자, 신북항에 해수청 및 해양수산 공공기관 집적하자, 여수박람회장을 세계적인 해양관광 메카로 육성하자, 에너지 허브항만을 조성하자, 수제선 정비와 국동어항과 남산동 연결 도로를 개설하고 만성리에서 신북항으로 연결되는 해안도로를 개설하자 이런 내용이 주로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과 과제는 해수부의 남해안 관광자원을 연계한 해양복합관광 거점항으로 육성하겠다는 여수항 기본 구상과 일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은 올해 제4차 국가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데 그럴 계획이 있으신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제일 우리 시민들이 관심이 있는 것이 여수해수청의 신북항으로 이전입니다. 아시겠지만 여수해수청사는 지금 구 여수시 청사

를 매입해서 쓰고 있는데 이것이 바닷가에 있는 게 아니고 육지 가운데 있고요. 삼려통합과 관련해서 구도심에 여수시 청사를 복원하는 게 여수 시민 다수의 여론이고 또 민선 8기 현재 여수시 정부의 기본 방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구용역 결과도 그렇게 나와 있고 제가 시장 때도 해수부에 공문을 보내서 촉구를 했고, 다시 한번 장관님께 요청을 드리는데요. 해수청을 신북항으로 옮겨서 해양 관련 공공기관을 집적화해 주시고 이걸 여수시에 팔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 그런 계획 반영하시고, 해수부 청사 계획에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십니까, 어떠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항만개발계획하고 청사 매각 뭐 신설 이게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주철현 위원** 그러니까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그런 절차들 제반 사항을 감안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아니, 해수부의 용역 결과가 나온 사항이니까, 제안된 사항이니까 적극적으로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일단 매입 의사부터가 확인이 되고요……

○**주철현 위원** 여수시는 매입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시장 때도 했고 지금 시장도 여수해수청사를 매입해서 양 청사 체제로 가겠다고 의회에서 몇 번 이야기해서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1차를 안 하셨기 때문에 2분 드리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를 못 했더니…… 고맙습니다.

하여튼 장관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 시민들의 숙원을 이뤄 주시고 여수 시내의 원도심도 발전할 수 있게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알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다음은 여객선 공영제와 관련해서 촉구를 드리는데요. 제가 보기에 여객선하고 도선이 대중교통에 포함됐는데 해수부에서 주무부서가 돼서 여객선, 도선은 집중해서 뭘 해야 되는데 보니까 대중교통기본계획에 해수부 계획이 반영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여객선과 도선의 준공영제,

일부 보장으로만 그러지 마시고 모든 여객선·도선에 대해서 해수부에서 책임지고 최소한 준공영제는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급한 것이 화물차나 승용차, 승합차, 전기차 등 일반 차량은 차종에 따라서 운임 할인 지원이 되는데 도서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오토바이 부분이 할인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도 개선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알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다음은 제가 해수부와 함께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법을 2021년 제정을 해서 어민들이 굴이라든지 패각 관련 여러 가지 무지하게 좋아하는데, 사실상 이것은 일선 현장에서는 큰 기대에 부풀어 있다가 법이 제정된 지 3년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뚜렷한 정책 변화가 없고 예산 조치가 안 따르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전처리 시설과 관련돼서 작년에 올해 국가 예산에 한 15억 정도를 반영하려고 노력해 봤는데 그것조차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해수부 의지가 중요한 것 같고, 전처리 시설을 수산업 현장에 바로 설치해서 어민들이 쉽게 전처리를 할 수 있고 재활용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실질적인, 어민들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손에 잡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도 관심 갖고……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지역에 관심 가지고 있고요. 전처리 시설 확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위원님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철현 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해수부에서 도와주셔서 여수박람회장 11년째인데 이제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인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인수해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만 올 5월 달이 되면 항만공사가 인수해서 이걸 운영하게 되는데 항만공사의 의지가 아직까지 시민들에게 느껴지지 않고 그래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수부가 직접 나서서, 박람회장을 인수하고 새롭게 계획을 세우는 데 항만공사보다는 해수부가 앞장서서 이끌어 주시고 주도적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제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건 해수부에서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그리고 이것을 하려면 현재 항만공사 3개 본부가 있는데 사장 직속의 별도 본부체제로 해서 직영을 해야지만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예산이라든지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혁신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하지 싶습니다.

물론 정부 내에서 조금 이견이 있는 줄 압니다. 마는 그래도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게 아니고 기관이 합병되는만큼 가급적이면 장관님께서 관심 갖고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기재부하고 제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시민들이 이 부분을 가장 걱정하고 있으니까요 장관님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그런데 말씀드리자면 저는 자회사 체제도 오히려 독립적이고, 이게 의지를 가지고서 예산만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좀 더 독립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사실입니다.

○주철현 위원 그래도 하늘과 땅 차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알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장 직할체제로 별도 조직을 가동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주철현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주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신정훈 위원님이 처음에 안 하셔 가지고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 김종욱 해양청장께 묻겠습니다.

저는요 해양경찰도 마찬가지고 해수부도 마찬가지지만 험난한 해상 환경, 해양환경 속에서 국민들의 안전 그리고 또 해양자원을 보전하고 국토를 보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신다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특히 또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과 같은데, 해양경찰의 임무 중에 굉장히 어려운 임무들을 가지고 있어서 늘 저는 실제로 역지사지하는 개념으로 해양경찰의 어려움과 그 노고에 대해서 굉장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해양경찰 수장이 되신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로를 드리고요.

저는 지난번 세월호 당시의 농해수위원이었기 때문에 그때의 해경 그리고 또 이번 정권 교체기의 서해 공무원 사건 등을 통한 해경의 수난사를 보면서 해경의 지도부가 참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정치권에 원죄가 있기는 하지만 해경 수뇌부로서의 어떤 원칙 있는 행정 또 소신 있는 행정을 통해 가지고 해양경찰의 명예와 자존감들 지키고 부하 직원들의 안위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지금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청장을 맡으셨다는 거 아시지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그렇습니다.

○신정훈 위원 전임 청장은 여러 차례, 우선 수사 번복 그리고 면피성 답변 이런 것들로 해서 조직의 신뢰감을 잃었고 그 결과로 해양경찰 지휘부는 이제 감사원과 검찰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는 처지로 전락했는데요.

현재 해경은 이례적으로 총경 인사만 진행하고 경무관 인사 등 고위 간부 인사를 스스로 하지 못하는 처지, 차장도 공석이고 지방청장 3명이 사실상 공석인 상황인데…… 정말 입만 열면 안보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권이 전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으로 우리 해양안보를 책임지는 해양경찰의 지휘부 공백을 초래했다 이런 국민들의 파가운 시선이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안보 파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취임하자마자 간부 인사도 제대로 할 수 없는 해양경찰의 지휘부, 식물지휘부 아니냐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아무튼 직위에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 해양경찰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조금 더 소신 있고 또 당당하게 본인의 행정들을 펼쳐 나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먼저 인사 관련해서는

정년퇴직이나 결원 등을 고려해서 인사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지어서…… 다만 지방청장이나 차장직무대행, 경무관이 직무대행 체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저희들이……

○신정훈 위원 할 수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좀 더 신중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치적으로 아직 할 수 없는 상태입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할 수는 있는데, 청장이 와서 대상자들의 직무 능력이라든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신정훈 위원 감사원, 검찰의 처분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 정년퇴직이라든지 결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청장이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 위원 조속히 인사 공백 해소하시고요. 또 정말 소신 있는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서해 공무원 사건 수사 결과를 사실 번복했습니다. 사실을 토대로 실족이나 극단적 가능성이 아주 매우 낮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감사원이 치고 들어와 가지고 해경의 수사 내용 허위라고, 잘못됐다고 해서 번복을 하셨는데…… 이건 해경의 명예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소신이 있습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감사원에서 그동안에 수사행정이나 일반행정에 관련해서 감사와 그다음에 확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결과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훈 위원 이게 이걸로 끝나면 좋지만 정치는 영원한 것이 아니고 5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다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그런 행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수부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장관님. 사실상 실족사로 확정 짓는 해수부 공무원, 수사를 번복해서 실족사로 확정하고 지금 해수부장을 단행하고 결국 인사혁신처에 순직 처리의 단초를 제공했는데요. 월북 논란을 떠나서 사망의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치행정을 펼쳐야 될 행정기관이 정권의 눈치 보기로 원칙을 허문 것이 문제고요. 이제 이 문제는 또 다른 논란의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해당 공무원의 순직 처리 관련해서

정말 근거를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인사혁신처에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회의록 등을 요구했는데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국회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요.

장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순직 처리에 대한 해수부 입장은 됩니까? 지난번에 답변하셨습니지만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우리 부에서 고인 사고에 대해서 실족으로 결론을 내린 바는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다시 한번 드리고요.

해수부 공무원으로서 고 이대준 씨가 직무를 수행하다가 실종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 직원이 유리한 방향에서 해수부장으로 결정을 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정훈 위원 실족이라고 결론 내린 바는 없나?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신정훈 위원 그것이 공식적인 입장인데 그러면 실종이라고 본다, 실종?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계속 이야기합니다만 그거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다는……

○신정훈 위원 실종인 것도 잘 모르겠나?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리한 방향으로……

○신정훈 위원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제 입장에서는 저희 직원이 유리한 방향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신정훈 위원 아마 이 문제는 국회에서 자료제공 거부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또다시 사정기관의 수사 대상이 되지 말라는 그런 법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깜깜이 아무것도 모르는, 원인도 모르는 사람에게 순직 처리하고 거기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을 한다 이런 것은 또 다른 논란의 시작이다 이런 측면에서 아까 도입부에서 말씀드렸지만 해양수산 또 해양경찰 행정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요 거기에 대한 양 기관장의 소신 있는, 더 이상 다시 악순환을 재발하지 않고 반복하지 않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러 달려오신 건가요?

○위성곤 위원 예.

○위원장 소병훈 다 끝났는데.

(웃음소리)

5분 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장관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근해연승 이중갑판 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위성곤 위원 이중갑판 문제가 지속적으로 문제되어지고, 실제 어민들은 관련되어서 이중갑판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것 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위성곤 위원 결국은 작업의 편의 그다음에 작업 과정에서 안전의 문제 이런 문제가 걸려서 이중 데크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선복량에 계산을 함으로써 실제 이것 검사받을 때마다 뜯어내고.

뜯어내는 데 얼마 정도 드는지 아세요, 한 20t 정도 되면? 얼마 정도 들 것 같아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1000만 원 정도는 들 것 같습니다.

○위성곤 위원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비용을 해 주는 게 훨씬 더 어민들에게 유리한데, 그리고 이중 데크가 목이 이렇게 15cm 정도 올라오는 거거든요. 이게 작업을 하다 보면 걸리고 넘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일자로 쪽 맞춰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과거의 개념으로, 자꾸 이걸 선복량 개념으로 계산을 하고 계셔서 이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인데요. 점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기본적으로 톤수에 산입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규제를 풀려고 그립니다. TAC로서, 어획량 규제로서 일원화하고 여기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TAC를 수용하는 데 대해서는 그 규제를 지금 대폭적으로 풀겠다……

○위성곤 위원 TAC 조건만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나무 데크로 하게 되어진 경우는 금방 썩고

다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요새는 PVC로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개선안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해기사 시험을 어디서 보는지 혹시 아십니까, 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해양수산연수원에서 보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부산하고 인천에서만 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정시의 경우에는 부산·인천에서 보고 상시의 경우에는 수요에 따라서 이렇게……

○위성곤 위원 인천 응시자 수가 1470명 정도 돼요, 2022년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제주가 1년에 네 번을 보는데 한 540명 정도 응시합니다. 한 번 응시마다 1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부산과 인천만 돼 있어서 지금 전남 지방을 중심으로 한 전남·전북권에 시험 시설이 필요하다. 이쪽도 보면 여수가 582명 그다음에 군산이 512명, 목포가 1162명이나 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 부산, 인천 가서 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해경청장님, 화순항 정박 어선에서 선저폐수 해양투기가 적발되었습니다. 지난 2월 12일 예요. 그런데 관련해서 점검을 하다 보니까 지난 6년간 전체 단속 건수가 3건밖에 없어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통계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위성곤 위원 해경에서 받은 자료인데 단속 건수가 폐유헌유가 2022년에는 없었고 2021년에는 1건, 2019년에 1건, 2017년에 1건밖에 없어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위원님, 폐유헌유만 그렇고 선저폐수라든지 폐기물 등을 합하면 5년간 한 120여 건 정도 됩니다.

○위성곤 위원 전국적으로?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폐유헌유만 따지면……

○위성곤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선석 수에 비해서, 실제 이것에 대한 단속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단속을 어떻게 하실 건지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해수부장관님, 면세유 그리고 농사용 전기 관련해서 어가들의 시름이 이만저만 아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위성곤 위원 관련해서 해수부장관의 복안은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일단 면세유 부분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기 사용 부분에 관해서는 3년간 나누어, 인상분을 일종의 유예시켜 놓고 있는 부분이니깐 최대한 우리가 전기를 아낄 수 있는 절전형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 보급이나 이런 부분들도, R&D 연구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가능한 기름값 인상분을 상쇄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위성곤 위원 이제 농사용 전기료가 정률제에서 정액제로 바뀌었잖아요. 바뀌었는데, 수산물 소비도 줄어 들고 물가도 올라가고 있는데 정액제로 바뀌어서 가장 큰 부담을 하고 있는 게 농사용 전기료 쓰고 있는 농민과 어민입니다.

특히 어민들인 경우는, 양어장인 경우는 실제 금액이 어마어마해요. 한 달에 한 3000만 원씩, 5000만 원씩 내는데 증액분이 그 정도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죽겠다고 합니다. 관련되어진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액제로 정책이 전환되었더라도 일시적으로 이 정액제를 정률제로 바뀌어서 운영하는 방안을 해수부에서는 강력히 산자부에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왜 어민들만 더 많은 짐을 져야 되느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짐을 나눠 지겠다. 한전의 농사용 전기 요금이 원가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 부담을 앞으로 인상해 나가겠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의 애로는 해결해 줘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좀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두 번째로 관련되어진 마이크로

수력이나 지붕 위의 태양광 시설을 긴급 보조를 통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실제 전기료를 많이 차감할 수 있을 겁니다.

봤더니 전체 사용하는 전기량의 한 30%는 그걸로 다 커버가 가능합니다. 긴급적으로 지원되어진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해 주시면 어가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소병훈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차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차 질의는 두 분이 신청하셨기 때문에 두 분 3차 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우선 제가 2차 질의를 마치면서 장관님께 짧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해양치유센터 건립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계획대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지금 지자체 네 군데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그러니까 지금 태안, 울진, 고성…… 완도는 지금 다 됐나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거의 준공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그런데 그 운영을 지자체에서 맡아서 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농진청하고 치유농업 관련해서도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산림청 같은 경우는 산림치유원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네덜란드 출장을 제가 해수부 직원하고도 함께 갔습니다. 네덜란드에는 치유농업이 매우 성행, 발달해 가지고 치유 농장이 한 1000여 개가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한 10개밖에 없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하고 다른 점이 거기서 거의 병원처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치유농원에 들어오면 그 치유농원에서 필요로 하는 비용을 지자체에서 그리고 일부는 정부에서 주고 있는데요. 저는 치유농장이나 산림치유원도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걸 원하지만……

제가 이번에 해양치유센터 건립 계획을 보니까 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1500억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장관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한 해양치유에 대해서 정부에서 복지 차원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나라처럼 의사의 처방을 가지고서 복지 차원의 해양 치유 쪽을 한번 진행해 보실 생각 없습니까? 연구 한번 해 보셨으면 해서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저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그게 더 효과적, 그러니까 의료 비용 자체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역시 해양치유 자체가 의료보험을 받아서 의사의 처방에 의해 가지고 들어와서, 거기 치유 환자가 오게 되면 면회도 와야 되고 또 가족들이 모이기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로 인한 부수적인 사이드 이펙트로서 관광이 활성화되고 또 그러면서 생태계가 만들어지면서 발전돼 가는 그런 모델들을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용역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정량화해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의보공단이면 의보공단 복지부예다가 제시할 수 있으면 제시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제가 제시하고 그렇게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그러면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어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소병훈 지난번에 안병길 위원께서 부산 쪽에 토론회를 하셨는데 굉장히 많은 분이 참여하시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그 일에 대해서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치유농장도 좋고 산림원도 좋지만 지금 해양치유원 같은 경우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규모 있는 시설을 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서는 충분히 치유로써, 그러니까 복지 차원의 치유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저는 장관님께서 한번 깊게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산재도 약간 홍보 말씀 드리자면 산재 차원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고, 산재 환자들 그냥 두는 것, 집에서 요양하고 이러는 것보다도 거기서 체계적인 치유를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산업 현장에 더 빨리 복귀할 수 있는 그런 효과까지도 한번 검토해 보자라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그건 수시로 저도 의견을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 소병훈 그러면 남은 두 분 3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3분이고요.

여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구 위원 오늘 해경 때문에 정책 질의를 못 해 가지고 3분 동안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청보호 전복 사고 때문에 국민들께서 많이 안타까워하시는데요. 이번 기회에 철저하고 충분한 선박 검사를 위해서 현장의 검사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철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해양교통안전공단에 현장 검사원이 147명 정도 되더라고요, 현장 검사원이. KOMSA에서 지금 선박 검사를 하고 있잖아요. 검사원이 147명이에요, 147명. 그런데 검사 물량이 연간 3만 200척, 그러니까 일선 검사원들이 1인당 연간 200척 넘는 선박을 검사하고 있어요. 연간 2500 시간을 일한다고, 이 사람들이.

제가 이분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가졌었거든요. 부산에 갔었어요, 부산. 부산에서 직접 가져 봤는데 너무 피곤해 해요, 피곤해 해. 이게 1인당 연간 200척이 넘는 선박을 검사하다 보니까 휴일 빼면 거의 하루에 1척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출장 거리도 많고 어촌들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검사원들의 업무 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구 위원 모두 엄청납니다. 아주 얼굴에 피곤이 찌들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제대로 된 선박 검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제 부탁은 검사원의 인원도 좀 늘리고 또 현장의 노동 환경 개선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특별히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문제의식만 느끼고 구체적으로 안 했는데 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구 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또 요즘 해운업들이 많이 어렵잖아요. 우리나라 물량의 99%가 다 선박을 통해서 운송되고 있는데, 제가 해운업이 어렵다 그래 가지고 국적선사 이용률도 좀 높이고 선화주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해서 얼마 전에 국회에서 토론회를

한번 가져 본 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우수 선화주 인증제 문제 지적을 하더라고요.

우수 선화주 인증제 문제 아십니까, 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선화주 인증제 말씀이시지요?

○여기구 위원 예.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여기구 위원 그런데 이것 문제가 뭔지도 잘 알고 계세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혜택이 좀 약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구 위원 그렇잖아요. 이게 화물을 수송하는 비용이 전체 비용의 40% 이상일 경우에, 국적선사를 이용해서 40% 이상일 경우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인센티브로는 운송 비용의 1%에 대한 세액공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40% 맞추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25%로 낮추면 좋겠고. 인센티브도 1%는 너무 적다, 이걸 한 3% 정도는 줘야 국적선사를 이용할 인센티브가 생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에 빠졌지요? 조세특례법 개정안에 이게 빠졌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저희들은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여기구 위원 이것을 다시 한번 노력을 해서, 기재부와 다시 협의해 줄 생각은 없으세요? 이게 지금 국적선사 너무 어려우니까, 선화주들이.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사실 국적선사를 이용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기재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여기구 위원 꼭 좀 협의를 해서 선주와 화주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알겠습니다.

○여기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병훈 여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의 순서입니다.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 김승남 위원입니다.

해경청장님!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김승남 위원 남해 청보호 사고 때 헬기 도착

시간 얼마나 걸린지 아십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저희들이 한 38분 만에……

○김승남 위원 합정 도착 시간은?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한 56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김승남 위원 최초 신고 접수는 어떤 방식으로 돼 있었지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당시 승선원인 선원이 전복된 선박…… 휴대폰으로 112를 통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김승남 위원 최근 3년 동안 해양사고 현장 도착 소요 시간을 보면 29분대인데 이렇게 늦은 이유가 뭐지요, 평균치보다 늦은 이유?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사고 지점에 저희들 현장 세력이, 경비정이 가깝게 있으면 좀 빠르고…… 현장 세력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최소한 1시간 내에 접근을 하려고 교육훈련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거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남 위원 이 배에, 정보호에 EPIRB(조난신호 자동발신장치) 부착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었지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부착이 되지 않았습니

다.
○김승남 위원 지금 우리 규정에 보면 24m 이하의 이게 전부 부착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그렇습니다.

○김승남 위원 EPIRB(조난신호 자동발신장치)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어선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어선법에 따라서 길이가 24m 이상의 선박에서는 의무조항으로 설치……

○김승남 위원 24m 이상 선박은 몇 % 되지요? 몇 척 정도 되지요? 총 어선 수가 얼마나 되지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6만 1000여 척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승남 위원 24m 이상은?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이상 선박은 별도로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승남 위원 제가 알기로 한 2800척, 나머지 6만 정도는 거의 장착이 안 돼 있다는 건데 이것 조난사고 대비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예산

이 필요하겠지만.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부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승남 위원 조승환 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김승남 위원 우리 수산물 수출 1위 된지 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김승남 위원 뭡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김입니다.

○김승남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수출 업체들 표기한 것 보면 일본식 명칭을 계속하고 있어요, 노리라고. 이것 GIM(김)으로 해 가지고 수출될 수 있도록 해수부에서 책임지고 계도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김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승남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전반부 질의 때 이야기했습니다만 대통령 업무보고 때 가장 중요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그다음에 해양폐기물 오염, 해양쓰레기 이런 걸 이야기 안 하면 될 이야기하겠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논의되고 또 국가 시책으로 실제 정책적으로 해수부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장관급 이상 모이는 각종 회의에서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저희들도 안전으로 보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남 위원 그래도 대통령이 알아야 되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대통령님이 주재하시거나 또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회의에서 지금 상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남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 도중에 이양수 위원님, 서삼석 위원님, 홍문표 위원님, 윤준병 위원님, 안호영 위원님, 이원택 위원님, 이달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최춘식 위원님, 어기구 위원님, 주철현 위원님 그리고 소병훈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기관장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 기관장 및 관계 직원 여러분, 국회협력관, 의원실 보좌관 및 위원회 직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

해양경찰청

청	장	김	종	욱
차장	직무대리	김	용	진
경비	국장	이	명	준
구조안전	국장	여	성	수
수사	국장	김	성	종
국제정보국장	직무대리	박	승	규
해양오염방제	국장	조	현	진
장비기술	국장	최	정	환

○출석 위원(18인)

김승남	박덕흠	서삼석	소병훈
신정훈	안병길	안호영	어기구
위성곤	윤미향	윤준병	이달곤
이양수	이원택	정희용	주철현
최춘식	홍문표		

○출장 위원(1인)

윤재갑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권영진
전문위원	정연수
전문위원	공춘택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차관	송상근
기획조정실장	전재우
해양정책실장	송명달
수산정책실장	이경규
해운물류국장	윤현수
해사안전국장	홍종욱
항만국장	이수호
대변인	김재철
감사관	노진학
정책기획관	김혜정
해양정책관	이시원
해양환경정책관	정도현
국제협력정책관	김현태
수산정책관	최용석
어업자원정책관	최현호
어촌양식정책관	권순욱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홍래형
국립해양조사원장	이철조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강용석
국립수산물과학원장	우동식